
서남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019. 12.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제 출 문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서남권 NPO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 | | |
|----------|----------------------------------|
| ■ 용역수행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
| ■ 책임연구원 | 김미경 |
| ■ 공동연구원 | 이용희, 황현실 |
| ■ 지역연구원 | 김도은, 이광흠, 이용희, 이복자, 정준식, 최석희, 홍선 |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연구 요약	6
I. 서언	9
II. 서남권의 특징	12
1. 서남권 지역사회의 특징	12
2. 시민사회의 특징	27
III. 서남권 단체 현황 및 특성 분석	57
1. 서남권 NPO 단체 현황 및 특성	57
2. 서남권 네트워크 현황 및 특성 분석	72
3. 서남권 중간조직 현황 및 특성 분석	78
4. 서남권 협치 현황 및 특성 분석	84
5. 서남권 간담회 정리	95
IV. 총평 및 시사점	97
V. 첨부자료	105

연구 요약

서남권 7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과정은 시민사회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의 의미에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징이 서로 다른 7개구가 타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구의 고민외제와 타구의 고민외제가 함께 만나고 함께 논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의미 있는 시도였다.

○ 서남권 지역사회의 특징

- 서남권은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서남1권(강서, 양천), 서남2권(영등포, 구로, 금천), 서남3권(관악, 동작)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면적의 26.9%를 차지하고, 서울시 인구의 30.4%인 317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 서남권은 산업배후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1인 가구의 비율(25.9%)이 높고, 외국인 밀집주거지도 다수 포함된다. 타 권역에 비해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문화시설, 보건소, 장애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 서남권 시민사회의 역사 및 특징

- 서남권 시민사회 역시 서남1권, 2권, 3권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볼 수 있다. 서남1권은 신도시 개념이 강하고 환경과 문화재 보호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였으며, 서남2권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생활형 주민운동으로, 서남3권은 재개발지역 빈민운동에서 출발하여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 서남권에는 20년이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단체도 많은 편이며, 2010년 이후 만들어진 단체들을 통해 변화 성장의 기반도 풍부해 보인다. 자치구별 특성이 상이하지만 여성, 환경과 관련한 공통적 의제를 통해 네트워크 활동의 가능성도 보여진다.

○ 서남권 조사 분석 결과

- 설문문의 응답은 전체 204개(단체 161개, 네트워크 21개, 중간지원조직 22개) 였으나 설문 통계 이후 들어온 2개의 단체를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다.
- 서남권 단체들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활동과 네트워크가 진행되며, 광역시와 의 네트워크도 1~2개 정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은 1,000만원 이하, 상근자수 1~2명 정도의 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주수입원 역시 정기적회원수입, 비정기적후원수입, 보조금, 기타수입을 비슷한 비율로 가지고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안정한 상태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법적 형태와 관련하여 고유번호증(임의단체)이 가장 많았으며, 단체의 설립역시 2010년 이후가 74%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립된 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단체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역시 향후 만들어질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서남권의 네트워크 활동은 2016년 이 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네트워크들은 재정이나 환경면에서 가장 열악하지만 자발성에 강하게 기반하기에 소중한 NPO자원이며 경험이라고 보여진다. 네트워크 활동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단위여서 그런지 서남권NPO 지원센터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도 100%가 동의하였다.
- 중간지원조직은 2010년~2015년 사이에 7개, 2016년 이후 12개로 주로 박원순시장 이후 생긴 것이다.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기도 하여 의제·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 협치는 주요 의제임에도 아직까지 평가의 기준이 풍부하지 않아 필수가 아닌 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키워드를 뽑기 위해 주관식에 직접 응답하게 하였다.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72.3% 정도가 응답하였으며, 협치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체감은 단체 57%, 네트워크 60.7%, 중간지원조직 71.4%였고, 우려감은 단체 31%, 네트워크 33.3%, 중간지원조직 21.4%로 나타났다. 단체가 다른 조직에 비해 협치와 관련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대와 더불어 형식적 협치에 대한 균형적 견제로 보여져 추후 협치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치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단체의 89.3%, 네트워크의

100%, 중간지원조직의 95.5%가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네트워크 지원, 활동가 지원(직접지원의 개념보다는 활동가력에 대한 지원으로 보여진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단체지원과 정책의제 수립 지원 역시 높았다. 자치구와 서남권NPO지원센터의 관계 설정에서도 물적·인적·정보의 교류, 공동사업기획, 그리고 공동 아카이빙 등을 이야기 하여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 및 관계가 조금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 시사점 및 후속 과제

- 서남권 7개 자치구 공동조사·연구의 과정은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응답된 7개 자치구 네트워크의 실험장이었다. 최초로 7개 자치구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권역NPO지원센터의 역할 및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서남권NPO지원센터는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킹과 의제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구로구의 공익활동지원조례처럼 NPO가 성장할 수 있는 지역토대를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서남권 NPO의 74%를 차지하는 2010년 이후 설립된 임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체의 성장, 자치구 NPO의 성장, 서남권NPO의 성장 및 건강한 시민사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향후 서남권 신생단체들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은 후속사업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특성이 다양한 7개 자치구를 2~3개의 소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해 생태·환경, 젠더의제 등 서남권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공통적 요소를 살려 서남권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남권 NPO의 성장과 함께 가는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해 2020년 7개 자치구가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중요한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조사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서남권 7개 자치구 NPO의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I. 서언

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서울시 민선 7기 시정계획(2019년 ~2022년) 중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계획에 따라 권역NPO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시 서남권, 행정구역으로는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가나다 순) 등 7개 자치구 지역시민사회 생태계의 현황과 성장 방향 및 권역NPO지원센터 수요와 설립추진의지 및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서남권 7개 자치구가 공동(계약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이다.)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2019년 10월 28일 ~ 12월 10일까지 4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남권 NPO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서남권NPO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을 탐색하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표> 연구의 개요

○ 연구목적 :							
- 서남권NPO 현황파악							
- 서남권NPO 활성화 지원전략탐색 및 서남권NPO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 2019년 10월 28일 ~2019년 12월 10일							
○ 발주기관 :	서울시NPO지원센터						
○ 수행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 연구진 :							
- 책임연구원 :	김미경(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 공동연구원 :	이용희(사단법인 영등포마을) 황현실(구로시민협력플랫폼)						
- 지역연구원 :	김도은(사단법인 마음껏동작마을)						
	이광흠(열린사회구로시민회)						
	이용희(사단법인 영등포마을)						
	이복자(양천아이쿱생협)						
	정준식(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최석희(사단법인 마을인교육)						
	홍 선(관악공동행동)						
○ 연구일정							
월	10월	11월					12월
내용 \ 주	5	1	2	3	4	5	1
연구설계	●	●					
설문조사			●	●	●		
집담회						●	
보고서작성					●	●	●

서남권은 타 권역과 달리 7개 자치구로 이루어져있어 그 범위가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 지역의 특성도 각각 다르다. 오랫동안 활동의 뿌리가 깊은 지역으로 평가 받는 곳도 있고, 새롭게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며, 토착주민이 많은 지역,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이 많은 지역 등 그 특성이 너무도 다양하다. 이로 인해 과연 서남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런 의문에 기반하여 지역의 특징을 좀 더 들여다보고, 7개 지역이 서남권으로 인식하는 범위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최초의 시도이기도 하다.

지역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7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서남권 7개 자치구의 실질적 네트워크 활동을 실제 경험하였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지역별 성장 방안과 함께 서남권 공동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의 방안마련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1) 문헌조사

서남권의 지역적 특징과 서남권 시민사회의 역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서남권의 지역적 특징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 - 권역생활권계획 : 서남권」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 지역별 기본 현황을 지역 인구특성 및 지역시설 현황, 복지현황 등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서남권 시민사회의 역사 및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각 자치구별 지역연구자 또는 지역활동가가 직접 작성하였다. 역사가 길거나 지역 시민사회의 특성이 분명한 지역은 이미 다양한 연구나 출판물이 있어 조사가 좀 더 수월한 반면, 기존 조사가 없는 지역은 좀 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각 보고서를 수정하지는 않고, 편집만으로 담았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한 아카이빙도 추후 과제라고 보여진다.

2) 설문조사

서남권 NPO단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구글

설문을 활용하였다. 조사의 설명을 위해 직접대면, 전화설명 등 여러 가지로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설문의 응답은 전체 204개(NPO단체 161개, 네트워크 21개, 중간지원조직 22개)를 받았으나, 설문의 분석을 진행한 이 후 도착한 시민단체 응답이 2개가 있어 NPO단체는 159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다만 자료 정리과정에서 1개의 문항 통계를 분실하여 161개의 통계를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표기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사무실 소유형태, 보조금사업참여정도, 단체의 수입이나 설립, 상근자 현황 등의 일반적인 단체 현황과 자치구내 또는 권역 내 협력의 경험, NPO지원 예산이나 정책등과 함께 자치구별 서남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 권역NPO지원센터의 필요와 역할을 NPO단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협치와 관련한 내용은 연구방향 설정이 어려워 주관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집중하여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서남권 집담회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발견된 특징을 공유하고, 설문조사로 나타나지 않은 정성적 평가를 위해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설문 분석상의 이견이나 분석결과에 대해 의문점, 서남권 7개 지역이 첫 시도한 조사의 아쉬운 점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분석을 보완하고, 향후 과제로 정리하였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1회만 진행한 아쉬움도 추후 활동으로 보완하려고 한다.

II. 서남권의 특징

1. 서남권 지역사회의 특징

서남권은 7개 자치구(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남1권(강서, 양천) 서남2권(영등포, 구로, 금천) 서남3권(동작, 관악)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6.9%를 차지하고, 서울시 인구 중 30.4%인 317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서남권은 도시구성에서 물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상이한 3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서, 양천은 연립, 다세대, 아파트 숙박시설 위주, 영등포, 구로, 금천은 판매, 위탁, 문화집회, 공장시설 위주, 동작, 관악은 단독, 다가구, 교육연구시설 위주로 구성된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서남권은 산업배후 주거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24.4%)보다 높다(25.9%). 그 중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이 38.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주거지도 다수 분포하고 있고, 영등포구(34만), 구로구(33만), 금천구(19만)는 서울시에서 집중도 높은 외국인 거주율을 보이고 있다.

준공업지역 일대는 근대산업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구로구, 영등포구 일대), 대학가, 학원가 고시촌 등 교육 관련 기능이 밀집되어 있다(동작구, 관악구 일대). 공원녹지 분포도는 서울시 최저수준으로 도로 및 도시화에 따라 공원녹지 단절지역이 발생했다.

주민요구 및 자치구 현안과제로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확대,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급행간선철도망 경전철 추진, 침수피해지역 등 재해위험 대비, 노후주거지 및 주공흔재지역정비, 공용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갯길, 하천변 등 보행환경 정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 등이 있다.

서남권은 서울시 지표 값 대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문화시설,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문화시설,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은 우선공급 검토가 필요하다. 금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보건소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를 중심으로 우선공급이 필요한 상태이다.

1) 강서구 지역사회의 특징



강서구는 약 41.4㎢(서울시 면적의 6.8%)의 면적에 약 58만 명의 인구(서울시 인구의 5.6%)가 거주하며, 서측으로는 김포시, 남측은 부천시, 양천구, 북측에는 한강이 접하고 있다.

13개 법정동에 20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있고 공항, 방화 지역생활권, 마곡지역생활권, 염창지역생활권, 발산지역생활권, 화곡1

지역생활권, 화곡2지역생활권 등 6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어진다.

공항, 방화 지역생활권은 공항동, 방화1,2,3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서구 면적의 약 10.4%, 인구는 약 10만 6천명이 거주한다. 김포공항이 있는 공항동에 외국인 인구 및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고, 운수업, 도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김포공항의 물류기능은 약화되고 있고, 김포공항에 따른 높이규제로 인해 72.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 5개소, 정비계획 4개소로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뉴타운 해제구역이 다수이다.

마곡 지역생활권은 강서구 등촌3동, 가양1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서구 면적의 약 13.3%, 인구 약 5만 9천명이 거주한다.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산업, 업무용지 및 서울식물원이 들어섰다. 강서구 전체 현황에 비해 아파트 비율이 높고, 광역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에 반해 주차장, 도서관,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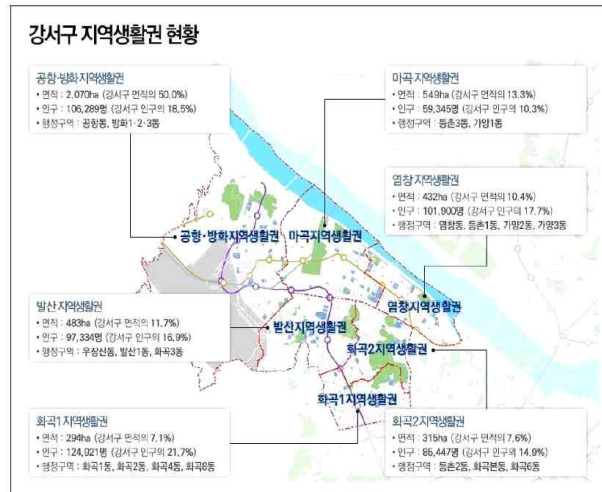
발산 지역생활권은 화곡3동, 우장산동, 발산1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의 약 11.7%, 인구는 약 9만 7천명이 거주한다. 세대 당 인구수가 높고 1인 가구 비율이 낮으며 마곡 일반산업단지 내에 다양한 신기술산업 인큐베이터가 들어서고 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공원과 도서관 비중은 높은 편이다.

염창 지역생활권은 염창동, 등촌동, 가양2,3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서구 면적의 10.4%, 인구는 약 10만 2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중 주거

기능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50%이상 차지하고 있고, 강서구의 관문으로 동서 간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노인 여가, 복지, 보육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화곡1 지역생활권은 화곡1,2,3,4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서구 면적의 7.1%, 인구는 약 12만5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세대 당 인구수가 낮고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김포공항의 최고고도지구에 따른 높이규제로 저층 주거지역이 93%를 차지한다. 다세대주택 중심의 주택유형이 높고 봉제산 근린공원, 특화가로, 곰달래 축제 등의 지역 특화자원이 있다.

화곡2 지역생활권은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6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서구 면적의 7.5%, 인구는 약 8만5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율이 높고, 광역교통접근성이 양호하며, 6m 이하 자연발생도로가 다수 분포되어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비율은 높지만 공공체육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2) 관악구 지역사회의 특징

관악구는 약 29.6km²(서울시 면적의 4.9%)의 면적에 약 55만 명의 인구(서울시 인구의 5.5%)가 거주하고 있다.



북측으로 구로구와 동작구, 남쪽으로 금천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3개의 법정동과 21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성대 지역생활권, 난곡 지역생활권, 대학 지역생활권, 봉천 지역생활권, 신림 지역생활권 등 5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어진다.

낙성대 지역생활권은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면적의 약 25.8%, 인구는 약 20.7%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와 이어져 있으며, 강남으로 연결되는 2호선이 이어지는 지역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 특히 낙성대동은 1인 가구의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다. 관악산을 축으로 경기도와 이어지는 지역으로 녹지지역이 65.0%에 달한다. 관악구 중 상대적으로 아파트형태의 주택이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서울시는 물론 관악구에서도 낮은 지역이다.

난곡 지역생활권은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으로 구성되며, 관악구 면적의 15.2% 관악구 인구의 25.0%에 해당한다. 세대 당 인구수가 관악구 평균보다 높으며, 1인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주거지역이 93.7%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주거비율이 높으며, 단독·다가구, 연립주택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노인여가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하여 도서관 공원 등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청소년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은 타 생활권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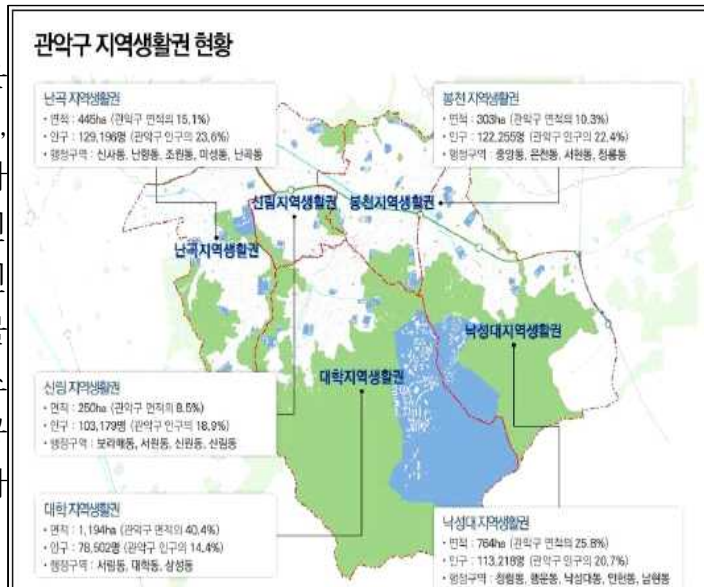
대학 지역생활권은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으로 구성되며, 관악구 면적의 40.4%, 관악구 인구의 약 14.5%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와 고시촌이 위치하고 있어 1인 가구가 54.2%로 높은 지역이다. 관악산이 있어 녹지지역이

72.4%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비주거비율이 35.7%로 상당히 높으며 단독·다가구와 아파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관1인당 녹지 비율은 아주 높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육시설은 타 생활권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봉천 지역생활권은 중앙동,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으로 구성되며, 관악구 면적의 약 10.2%, 관악구 인구의 약 22.4%가 해당한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서울시보다는 높으나 관악구 평균보다는 낮은 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이 89.5%로 높고, 관악구 내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우세한 지역이다. 공원과 주차장이 관악구에서 가장 부족하며, 노인복지시설의 지표도 매우 낮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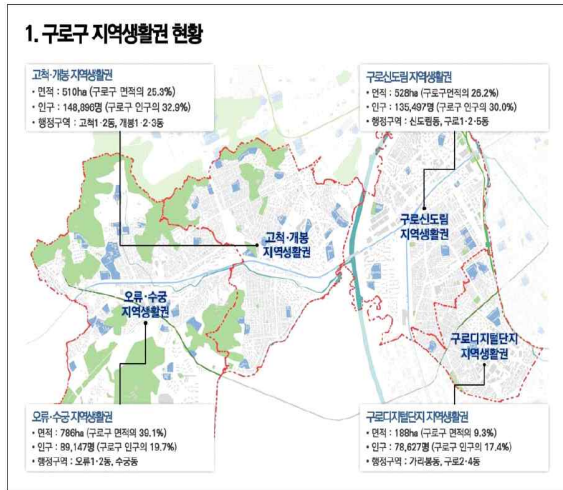
신림지역생활권은 보라매동, 신림동, 신원동, 서원동으로 구성되며, 관악구 면적의 8.5% 관악구 인구의 18.9%에 해당한다. 노령인구가 낮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신림동은 1인 가구 비율이 64.7%, 외국인 인구가 32.6%로 아주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단독·다가구, 다세대 비율이 높은 건축 형태를 띠고 있다.

1인당 공원면적이나 도서관은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차장은 관악구 평균보다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적은 지역임에도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관악구는 물론 서울시 보다 높으며,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구로구 지역사회의 특징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은 오류1,2동, 수궁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구 면적의 39.1% 구로구 인구의 19.7%(약 8만9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항동공공주택지구, 오류행복주택 등 대규모 주택개발로 향후 지역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밀도는 낮으나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문화복지시설 및 지역요구를 수용한 주민편의시설로의 복합화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유무형 지역자산은 풍부하나 인지성 및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구로·신도림 지역생활권은 신도림동, 구로1,2,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구 면적의 26.2%, 구로구 인구의 30%(약 13만5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신도림역세권 개발, 구로2동 다문화인구 유입의 특징을 보인다. G밸리, 구로기계공구상가, 중앙유통단지 등 준공업지역 정비, 관리 및 구로차량기지, CJ공장부지 등 대규모 이전적지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구로구 대비 생활권 내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비율이 높고, 저층 주택밀집주거지에 대한 정주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생활서비스시설과 도서관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소년아동복지시설과 1인당 공원면적 및 주차장은 부족하다.

디큐브시티, 테크노마트 등 대형쇼핑센터, 구로구청, 고대병원, 안양천, 도림천 등의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척·개봉 지역생활권은 고척1,2동, 개봉1,2,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구 면적의 25.3%, 구로구 인구의 32.9%(약 14만8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밀도 및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고척돔, 교정시설 개발 관련 환경문제 현안이 존재한다. 노후 저층주거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능 쇠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보육시설 등 아동관련 시설은 양호하고, 노인복지, 공공체육시설, 공원, 주차장은 부족하다. 역사·문화·자연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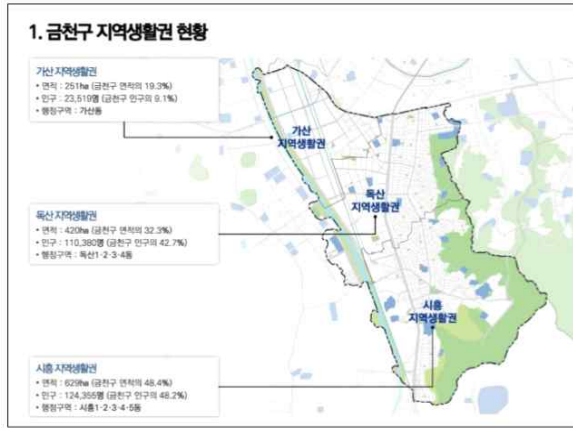
망라한 풍부한 지역자산을 보유(함양여씨묘역, 고인돌, 개웅산, 잣절공원, 구로 올레길 등) 하고 있다.

구로디지털단지 지역생활권은 가리봉동, 구로3,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구 면적의 9.3%, 구로구 인구의 17.4%(약 7만8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 인구 유입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되었다. 현재 G밸리 1단지의 도심형 업무사업 기능과 배후 주거기능을 수행한다. 저층 노후주거지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로구 대비 인구밀도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편이며,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양분되어 있다. 타 생활권에 비해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육 등 아동관련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인복지여가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4) 금천구 지역사회의 특징

독산 지역생활권은 금천구 독산1,2,3동 일대로 금천구 면적의 32.3%, 인구의 42.7%(약11만명)가 거주하고 있다.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G밸리 2,3단지에 인접하여 배후주거 기능을 수행한다. 관악산자연녹지, 군부대 등 대규모 가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G밸리 산업지원기능 육성, 구릉지, 주공혼재지역 등 특성주거지 관리가 필요하며, 군부대 등 대규모 이전적지의 복합개발이 이슈이다.

인구밀도가 높으며, 독산3동의 외국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제조업종사자가 다수 거주하며, 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체 비율이 높다. 주거비중이 높고,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비율이 금천구 평균 17.9%에 비해 높은 22.2%이다.

도서관 개소는 양호하나 1인당 공원면적 및 주차장이 부족하고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금천예술공장 등 문화시설을 바탕으로 한 발전 잠재력이 내재해 있다.

시흥 지역생활권은 금천구 시흥 1,2,3,4,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천구 면적의 48.3%, 인구 48.2%(12만 4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노령인구가 높으며, 운수업,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시흥대로 중심으로 서측은 준공업지역, 동측은 주거지역이 분포되어 있다.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위주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 다가구 14.9%, 아파트 54.4%이다. 도서관 개소는 양호하나, 1인당 공원면적 및 주차장은 부족하다. 서울시 전체 대비 공공체육시설은 양호하고 보육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문화제가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천마을예술창작소, 금천문화원, 금나래아트홀 등)

가산 지역생활권은 가산동 일대이며, 금천구 면적의 19.3%이고, 금천구 인구의 8.9%(약2만3천명)가 거주하고 있다.

패션산업 활성화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및 IT산업이 유입되었다. 현재 G밸리 2,3단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패션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능을 수행한다. 전략적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능적 육성과 주변지역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인구밀도는 낮으나, 외국인 비중이 높다. G밸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시설관리 및 제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소외된 산업단지 외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서울시 전체 대비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양호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부족하다. 산업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5) 동작구 지역사회의 특징

동작구는 약 16.3km²(서울시 면적의 2.7%)의 면적에 약 42만 명의 인구(서울시 인구의 4.2%)가 거주한다.



동쪽으로 서초구, 서쪽으로 영등포구, 남쪽으로 관악구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9개의 법정동과 15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량진 지역생활권, 사당 지역생활권, 상도 지역생활권, 신대방 지역생활권, 흑석 지역생활권 등 5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되어진다.

노량진 지역생활권은 노량진1,2동, 대방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구 면적의 23.1%, 인구는 약 21.6%에 해당한다. 노량진 수산시장과 노량진 학원가가 함께 있어 도매산업 및 학원가 교육특구지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작구 전체 대비 주거비율이 낮은 편이며, 주택의 형태에서 아파트가 다른 생활권에 비해 높은 지역이다. 공원이나 보육과 관련하여 서울시나 동작구 다른 지역대비 열악한 형편이기도 하다.

사당 지역생활권은 사당1,2,3,4,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구 면적의 33.1%, 인구는 26.8%에 해당한다. 경기남부권과 연결되는 관문지역이기도 하며, 국립현충원을 포함하고 있어 녹지가 31.1%로 동작구 평균 4.3%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 주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에도 보육,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은 열악한 형편이다.

상도 지역생활권은 상도1,2,3,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구 면적의 23.4%, 동작구의 인구의 약 30.0%가 해당한다. 숭실대학교가 위치한 상도1동이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청년주택에 대한 요구도 많은 상황이다. 주거지역이 99.7%로 가장 많고, 아파트는 동작구 평균보다 적으며, 다세대주택이 동작구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지역이다. 공원, 주차장, 도서관이 서울시 평균 뿐 아니라 동작구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공공체

육시설도 낮은 지역이다.

신대방 지역생활권은 신대방1,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구 면적의 10.1%, 동작구 인구의 11.9%가 해당한다. 도림천과 보라매공원이 위치하여 주거환경은 좋은 편이나,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가산·대림광역 중심과 계획적 연계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비율이 동작구보다 낮고, 아파트 비율은 높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타 지역 대비 열악한 상황이다.

흑석 지역생활권은 흑석동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구 면적의 10.3%, 동작구 인구의 약 9.2%가 해당한다.

중앙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1인 가구와 외국인 인구가 다른 생활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한강을 끼고 있어 향후 수변주거타운으로 아파트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타 생활권보다 우세하다.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다른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1인당 공원면적 등 대부분의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6) 양천구 지역사회의 특징

양천구는 약 17.4km²(서울시 면적의 2.9%)의 면적에 약 50만명의 인구(서울시 인구의 5.0%)가 거주하며, 동측은 안양천을 경계로 영등포와 연결하고, 북측은



강서구, 남측은 강서구와 연결하고 있다.

목동일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3개 법정동과 18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월1 지역생활권, 신월2 지역생활권, 신정 지역생활권, 목동1 지역생활권, 목동2 지역생활권 등 5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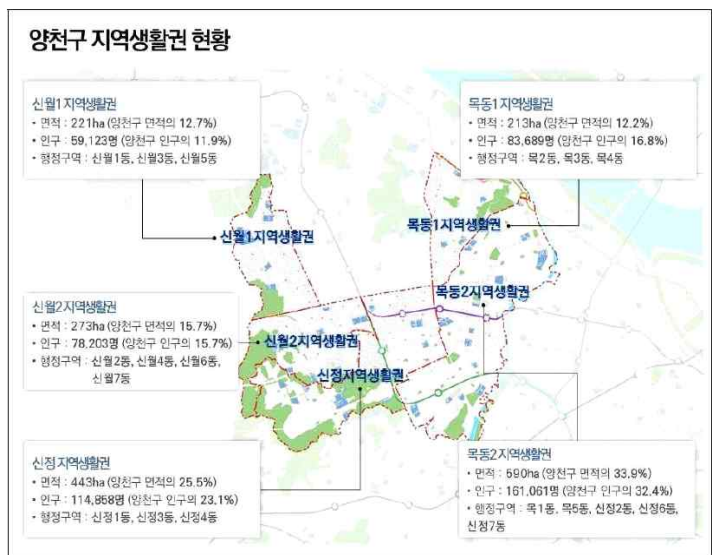
목동1 지역생활권은 목2,3,4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고, 양천구 면적의 12.2%, 인구는 약 8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거지역이 85.5%이고, 일부구간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아파트 비율이 낮고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공원, 주차장, 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모기동 마을축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공연이 용왕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동2 지역생활권은 목1,5동, 신정2,6,7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천구 면적의 33.9%, 인구는 약 16만1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이 낮고 생활권 중심에 상업지역이 분포해 있다. 계획시가지로 아파트 비율이 98% 이상이고, 목동 지역을 관통하는 경전철 신설이 예정되어있다. 청소년 아동 복지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신월1 지역생활권은 신월 1,3,4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천구 면적의 12.7%, 인구는 약 5만9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세대 당 인구는 낮으며,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신월사거리 주변으로 준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완료에 대비해 도시공간정비가 진행 중이다. 1인당 공원면적은 낮지만 주차장, 도서관은 높은 편이다. 서서울호수공원, 방아다리 벚꽃축제, 신원청소년 문화센터, 신월야구장 등 다양한 지역자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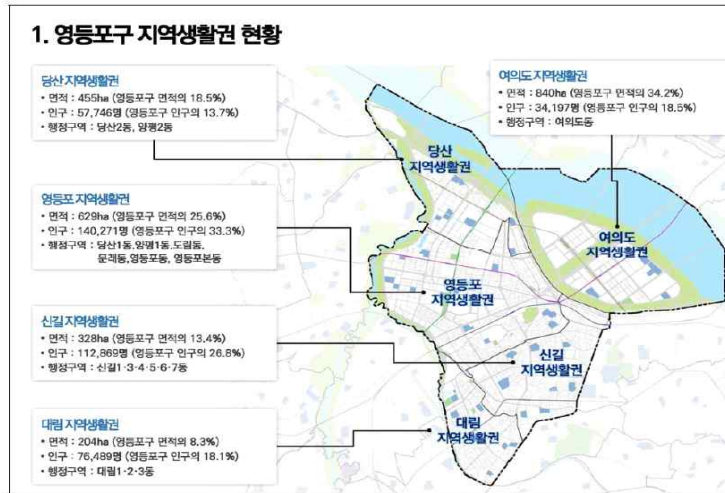
신월2 지역생활권은 신월 2,4,6,7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천구 면적의 15.7%, 인구는 약 7만8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거지역이 80%이며, 김포공항에 따른 높이 규제가 있는 지역이다. 제물포 터널 및 경전철 계획에 따른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하나도 없고 공공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신정 지역생활권은 신정 1,3,4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천구 면적의 25.5%, 인구는 약 11만4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영향으로 핵심생산 인구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녹지 비율이 높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3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간선 가로망 체계는 양호하고 주차장, 도서관이 부족한 편이다. 계남 근린공원, 목동 벚꽃축제, 목동 로데오거리, 골판지 마을 축제 등의 지역자원이 있다.



7) 영등포구 지역사회의 특징

영등포구는 약 24.36㎢(서울시 면적의 4.03%)의 면적에 약 42만명의 인구(서울시 인구의 4.2%)가 거주하며, 북측은 한강, 서측은 양천구, 남측은 구로구,



동측은 동작구와 인접하여 있다.

18개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고 영등포 지역생활권, 당산 지역생활권, 여의도 지역생활권, 신길 지역생활권, 대림 지역생활권 등 5개의 지역생활권으로 구분어진다.

영등포 지역생활권은 당산1동, 양평1동, 도림동, 문래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등포구 전체 면적의 25.6%, 인구는 14만 2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영등포 전체 산업체수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규모 토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준공업지역이 다수 분포하여 주거 비율이 낮은 편이다. 1인당 공원면적이 부족하고, 문래동 예술창작촌 등 특색 있는 지역자산 및 문화자원이 존재한다.

당산 지역생활권은 당산2동, 양평2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등포구 면적의 18.52%, 인구는 약 5만7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의 영향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교통접근성은 양호하나 도시간선도로로 인해 수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나 공공체육시설은 양호한 수준이다.

여의도 지역생활권은 여의도동 일대이고, 영등포구 면적의 34.3%, 인구는 약 3만4천명이 거주한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고, 녹지 지역이 65.8%로 가장 많으며, 상업위주의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중심의 정비사업이 많이 추진 중이고,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 많으며, 외부지역 간 연결성이 미흡하다. 유무형의 광역적 자산은 풍부하나, 지역주민을 위한 자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신길 지역생활권은 신길1,3,4,5,6,7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등포구 면적의 13.4%, 인구는 약 11만3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근린서비스(기타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기반의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소필지가 밀집해 있고, 주거비율이 높은 편이다.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1인당 공원면적과 주차장, 도서관이 부족하다. 다양한 지역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대림 지역생활권은 대림1,2,3동 일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등포구 면적의 8.3%, 인구는 약 7만6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산업비중은 미미하나 운수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역세권과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림천으로 인한 지역단절 및 내부도로망 정비가 미흡하고, 보육시설은 양호한 수준이나 기타 생활서비스시설은 부족하다.

2. 시민사회의 특징

* 서남권시민사회의 특성부분은 각 지역별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모든 단위와 소통하고 전체 정보를 취합하지는 못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지역을 정확하게 대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추후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1) 강서구 시민사회의 역사와 특징

이미선(강서시민협력플랫폼)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분구(1988년)된 후에도 시민활동을 강서양천권역으로 함께 진행했다.

1987년 6월 항쟁과 그해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강서·양천지부’로 출발하여 ‘겨레사랑주민회’를 거쳐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로 이어져 온 것이다. ‘강서·양천시민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우장산 살리기 운동과 그에 이은 공산문화유적 보호 운동, 신트리 백제박물관 건립 운동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인 주민사업을 통해 시민회는 강서, 양천구 내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았으며, 구청과 구의회 등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경 강서·양천시민회 조직은 상근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상태였고 그 시기 과제는 지지기반 조직과 조직체계 정비였다.

그 당시 강서·양천구의 민주단체간 일상적 연대의 틀은 지역 내 노동조합과 민주단체 등과 함께 ‘민주실현을 위한 강서·양천시민회의’의 형태에서, 1998년 ‘강서·양천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형태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 들어 사안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했으나, 일상적이고 긴밀한 연대틀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민회는 창립 초기인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시절부터 지역 내 민주단체 간의 연대사업에 큰 비중을 두어왔다. 이런 활동으로 시민회는 지역 내의 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행사에 주민들과 함께 지지·격려 방문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물결 청년회’(이후 ‘강서청년회’와 ‘양천청년회’로 나뉘어져 있음)의 경우는 초기 회원의 출신이 거의 같아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999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한 박범진의원 낙선운동이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라는 틀에서 1999년 강서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압선 지중화 사업으로 창립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2000년 창립), ‘서울남서여성민우회’(1994년 창립), ‘강서양천여성의전화’(1998년 설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립강서지회, 중등강서지회, 초등강서지회), ‘강서양천열린사회시민회’가 월2회 연대회의를 통해 강서양천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후 2007년 ‘교육자치시민회’ 창립 후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에 참여하며 ‘강서양천시민연대’로 재편되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등과도 연대활동을 도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환경, 양성평등, 인권, 가정폭력, 교육개혁 등 의정감시단, 환경보호, 주민소환제, 민주적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선거 등에서 성과를 냈다.

매년 12월, 송년회에서 강서양천 걸림돌상과 디딤돌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강서양천시민연대’ 활동을 하던 ‘교육자치시민회’ 박일남 대표가 과로사(2013.8)하여, 강서양천지역 최초로 고 박일남 선생의 장례를 시민사회장(2013.09.02.)으로 치렀고, 그 후 새롭게 변화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흡여지게 되었다.

이후 ‘마을넷’이라는 느슨한 형태로 연대모임이 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는 해소되었다.

이 시기 또 다른 네트워크의 흐름이 있었다.

2011년 강서시민단체활동가 학습모임으로 시작된 ‘강서지역사회네트워크’는 서울지역활동가 학습모임 ‘지역너머’(2012년 7월), 강서인문학커뮤니티사업과 협동조합학교, 환경영화상영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 1월, 비전워크숍을 통해 마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매체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마을신문기자교육(마을미디어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마을신문기자교육을 수료한 수료생 중심으로 후속모임이 조직되었고, 강서마을신문 창간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활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활동을 지속화하여 강서마을신문 ‘시민의 소리’(창간호 2015년6월)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심활동가의 부재로 결집력과 행동력이 약화되어 ‘강서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이 중단되었다. (2019년10월)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성장의 단계에서 연대를 강화하지 못하고, 마을활동가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기 때문에, 수년간 시민연대활동이 위축되었다가 지역현안과 이슈대응별로 지역사회에 연대의 흐름이 생기기도 했다. 2015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습지 매립 반대·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44개의 단체가 연대하였고, 24개 단체가 ‘2016 강서옥시대책위원회’¹⁾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등 불매운동과 지역 마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다시 연결되었다.

2017년 2월, 강서구 시민사회는 고 황금자 할머니를 비롯해 강서구에 거주했던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자 강서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고, 95개 단체가 참여해 총 65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2019년 11월 11일, 마곡 유수지 공원에 '강서 평화의 소녀상'²⁾이 건립되었다.

강서평화소녀상건립 추진으로 다시 모이게 된 시민단체들은 강서평화의소녀상 건립이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재는 서울시 협치사업의 하나인 ‘시민협력플랫폼’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포괄적 네트워크상과 활동에 대한 구상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이다.

-
- 1) 2016강서옥시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강서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평등학부모회,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서여성자원봉사연합회, 녹색발전소,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 민주수호모임, 반지하bnb, 서남환경주민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강서지부, 아파트네트워크, 양천생활환경실천단,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에코생협, 서울남서여성민우회, 강서양천여성의 전화, 주부환경연합회, 참여예산시민회, 한국여성연맹, 함께가는강서장애인부모회, 희망드림단협의회 등 24개단체
 - 2) 강서 평화의 소녀상 참여단체 - 강서FM, 강서시민의눈,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민중의집사람과공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강사회, 강서여성자원봉사연합회, 강서여성포럼, 강서장애인부모회, 강서참여예산시민회, 고려큐비클플러스, 공감플러스, 공공운수노조아시아나항공지부, 누리마음연구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생활전파소, 모해교육협동조합,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마곡지부,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모임, 예음회예술단체, 장담그는마을, 전교조사팀강서남부지회, 전교조중등강서지회, 전교조초등강서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서구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흙앤쇼팽지부, 종해문화진흥원, 징검다리예코맘, 책수다, 청년보라, 활짝미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포함 95개 단체

2) 관악구 시민사회의 역사와 특징

김미경(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관악구는 1960~70년대 서울 도심 개발과정에서 강제 이주당한 철거민들이 대거 밀집한 지역이다. 특히 1973년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편입된 신림동, 봉천동 일대는 달동네의 대명사였으며, 도시빈민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관악구 시민사회의 근간은 가난한 이웃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으로써의 지역운동, 주민운동, 시민운동이라고 특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화의 중심에 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관악지부(87)** 또한 87년 이후 지역주민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악동작지역교사협의회(88), 봉천놀이마당(88),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89)**를 결성, 지지, 지원하였으며, 이후 92년 대선투쟁에서 난곡주민회, 봉천3·6동, 봉천5·9동과 연대활동에 함께 하는 등 지역빈민운동과 연관되어 활동하였다.³⁾ 그렇기에 여기서는 깊이 있게 거론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추후 이런 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활동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 1980년대⁴⁾

1973년 난곡국수모임(김혜경)을 관악지역운동의 출발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난곡국수모임은 가난한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 국수라도 실컷 먹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모임에서 나눈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부방, **난곡희망의료조합** 등을 실제로 만들고 운영하면서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관악은 난곡을 중심으로 **난곡지역협의회(88)**와 봉천동 달동네 곳곳의 공부방, 탁아소, 민중교회, 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주민조직 활동이 활발하였다.

1990년대

1990년대 초반은 난곡주민회(91), 봉천3·6동 주민회준비모임(90), 봉천5·9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91) 등 권역별 주민조직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졌다.

봉천동 지역은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논의되면서 철거반대투쟁과 함께 더 많은

3) 「참 세상, 참 자치 -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관악주민 정책자료집」, 1995, 관악주민연대·참사회 실현을 위한 관악·동작 시민연대

4) 「마을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2017, 빈민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엮음, 한울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시도로 봉천주민신문 발행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봉천5·9동은 1993년 국회단지 마을버스요금 일방적 인상과 관련하여 활동가들과 함께 마을버스승차거부운동 등을 통해 버스비인상무효화를 만들어 내면서 조직된 주민의 힘을 느끼기도 하였다. 신림 10동은 임대아파트 내에 공부방 입주권을 얻어내기도 하였으며, 1996년에는 ‘삼성산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무효화’를 따내는 성과를 주민과 함께 주민 스스로 만들고 이루어내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특히 난곡에서는 1991년 부활된 지방선거에 김혜경이 기초의원으로서 출마하고 당선되게 하기도 하였다. 이는 최초의 독자적 후보전술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가난한 주민들과 생활밀착적인 활동을 경험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재개발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악주민연대(1995.3)**를 만들었다. 관악주민연대는 동단위의 주민조직과 권역별 활동 단위들을 모아서 구단위의 지역운동 연대체로 탄생하였다. 재개발과정에서 세입자보호를 위한 주민청원운동으로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고, 2기 의회에는 재개발 특위를 구성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흩어진 지역신문들을 모아 **(주)관악주민신문사**를 만들고 관악주민신문을 발간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관악주민연대 정치사업단 활동을 통해 3명이 출마하여 김혜경, 유정희 2사람이 당선되는 성과도 만들었다.

동시에 지역해체 이후 늘어나는 복지에 대해 주민을 주체로 만드는 새로운 사회복지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관악사회복지(1995.12)**를 별도의 단체로 만드는 과정도 있었다.

9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 장애인, 위기가정을 위한 단체인 **관악자활지원센터(96)**,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97)**,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97)**, **신림청소년쉼터 우리세상(98)**, **위기가족공동체 살림터(98)**, **난곡사랑의밥집(99)**,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99)**, **SOS기금회(99)**가 탄생하였다.

2000년대⁵⁾

2000년대 들면서 관악구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서, 달동네는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새로운 주민들도 늘어났다. 기존 빈민운동 기반의 활동은 여전히 **임대아파트 주민의 권리찾기 활동**으로 지속되었고, 새로운 주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5) 관악시민협력플랫폼 성과보고회(2019, 11,19) 자료, 관악주민연대 총회자료집 참조

단체들도 생겨났다. 관악공동체라디오(04), 푸른공동체살터(06), 관악도시농업 네트워크(07),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08),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 관악 지부(09) 등의 다양한 단체가 생겨나면서 지역현안을 통한 일상적 연대운동(구청장매관매직, 광우병, FTA, 4대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존 공부방활동의 연장으로 교육복지네트워크[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08) + 봉천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11) → 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12)]가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예산네트워크(06)를 만들어 예산분석 및 예산감시와 예산참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전 일상적 연대활동을 통해 2011년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라는 상설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성과의 기반이 되었다.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는 2019년 해소되기 전까지 지역 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로서 중심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연대활동에서 주목할 것 중 관악지방자치연대(02), 531지방선거관악 네트워크(06), 관악유권자연대(10)등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 선거를 대응하기 위해 만든 활동이다. 98년 직접후보를 내어 2명이 당선되었고, 02년 관악지방자치연대 후보자 약속운동을 통해 구의원 2명이 당선되기도 하였으며, 관악유권자연대(10)의 직접 출마 주민후보 전술은 낙선으로 마무리되는 등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관악의 시민운동은 주민정치세력화, 지역정치에의 직접참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하지만 2010년의 패배는 이 후 직접 후보 전술을 부담스러워하며 한 발 물러나 소극적 활동으로 가게 만들기도 하였다.

참여자치관악연석회의(03)는 다양한 지역단체의 대표들이 월례회의를 통해 지역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으며, 현재 관악공동행동의 모태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대

2010년대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통한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위탁을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활발해 진 것으로 특징된다.

세상과 연애하기(11),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18) 작은따옴표(14), 브릿지칼

라, 아야어여(18) 등 청년·문화·예술 단체가 등장하고, 생활문화를 나누는 다양한 공동체와 공간공유 활동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12),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15), 협동조합관악위즐(18),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17), 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19)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주체들도 만들어졌다. 이들은 기존 지역활동의 경험을 사회적경제라는 형식으로 변화, 성장한 것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사업의 센터 위탁을 위해 관악마을마당(12)을 만들고 이후 사회적경제와 통합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16)을 창립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업으로 지역이 분화되고, 당면한 업무에 집중하면서 관악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역할이 미루어지는 듯도 했지만 2014년 관악주주파티, 2018년 지방선거 관악시민행동을 통해 주민정치의 영역도 놓치지 않았으며, 분산된 정책의 변화를 좀 더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상설연대조직으로 관악공동행동(18)이 창립되는 큰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현재 관악공동행동은 시민기반위원회, 시민정치위원회, 시민협력위원회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악시민사회의 특징

1970년대 빈민운동에서부터 이어져온 관악의 시민사회는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주거, 노동, 돌봄, 생활, 복지, 교육, 경제, 생활정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중심성을 놓치지 않았다. 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도 지역운동과 결합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지역중심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⁶⁾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200여명의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이어진 경험은 각각의 완결성이 높은 단체를 만들었으며,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이었기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를 만들어 적극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사업에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별 단체 활동과 위탁사업으로 활동의 과부하와 활동가의 부족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6) 2014년 관악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관악구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지역 기반 단체

관악시민단체연대회의(15)를 통해 임시로 지역현황에 대응하였지만, 기민하고 밀도있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더 다양해진 지원사업은 지역과 시민사회를 조사·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⁷⁾

관악은 이런 흐름 속에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014년 6월 선거를 거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공론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15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통합 성장전략워크숍’⁹⁾에서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가)공익활동지원센터설립이 주요전략과제로 도출되었다. 같은 해 ‘2015지역의제연구조사보고서’에도 지역NPO 장기과제로 풀뿌리단체상설네트워크와 단체·활동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통합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흐름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관악공동행동’의 창립이다. 지역사회현황 및 거버넌스 참여가 확대된 상황에서 단체간 책임있는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버넌스의 성과가 부재하며, 애드보커시 활동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고자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사회의 3주체가 함께 전략적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협력플랫폼을 실무주최로 준비위 단계를 거쳐 2018년 12월 ‘관악공동행동’을 창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마련이다. 2회에 걸친 풀뿌리기금모금과 배분¹⁰⁾, 협동조합위즐¹¹⁾을 통한 안정적 자원 토대 마련 활동, 1년에 걸쳐 진행된 시민자산화 토론회¹²⁾ 이외에도 NPO지원센터나 지역재단 등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이 후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는 현재도 고민 중이다.

7) 2014년 마을공동체, 2014년 사회적경제, 2015년 시민사회 등이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8) 2014년 지방선거 대응 ‘관악주주파티’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센터 설립의 요구를 모아 그 해 민선 6기 관악구 매티페스토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2014년 11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하였다.

9) 2015. 9. 14 ~ 11. 27까지 총 7회에 걸친 워크숍에 시민사회 5인, 사회적 경제 3인, 마을공동체 2인이 참석하여 4대전략 10대 과제를 만들었다.

10) 2017년 10월 ~ 2018년 2월에 진행된 관악뿌리기금 시즌 1에서는 9,757,600원의 기금을 모으고 공모를 통해 30개 사연 8,985,000원을 배분하였으며, 2018년 11월 ~ 2019년 2월에 진행된 시즌 2에서는 12,509,100원의 기금을 모으고 역시 공모를 통해 총 18건 10,840,000원을 배분하였다.

11) 2017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관악도농상생단 사업을 통해 농산물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재정 안정을 고민하고 있다.

12) 관악공동행동 시민기반위원회와 관악공동체라디오가 공동으로 ‘관악구 시민자산화 상상하기1,2,3’을 주제로 올 한해 동안 3차례의 포럼을 진행하였다.

3) 구로구 시민사회의 역사 및 특징

김성국 (구로시민센터)

1. 구로지역 사회운동

인류의 역사가 다 그러했듯이 우리의 선조들도 긴 세월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면면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 식민지시대,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독재정권 시절 등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3.1운동, 항일독립무장투쟁, 분단반대투쟁, 반독재 민주화 투쟁,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통일운동 등 쉼 없이 우리 사회를 인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구로지역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04년에는 구로항일운동¹⁾이 일어났고, 1919년 만세운동²⁾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1964년부터 구로에 구로공단(공식명: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면서 당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겨납니다. 1970년 전태일의 죽음 이후 구로공단 일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생겨납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의 노동운동은 주로 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 조건 개선, 조합 결성, 중간관리자 배척 등의 요구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의 노동운동은 아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으므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도시산업선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결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리봉전자의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부흥사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에게 노동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친목 활동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리

1) 1904년 9월 경부선 철도 부설 공사 중 구로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운동. 철도 부설 공사에 필요한 역부 차출을 거부하는 투쟁이 일어나 시흥군수 박우양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관사를 부수는 한편, 도망가던 일본인 석공을 살해.

2)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한민족은 국내외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거족적인 만세 운동을 펼쳤다. 이에 계양 주민들도 3월 24일 오후 2시경 오류리의 심혁성의 주도하에 장거리 황어장터 장날을 이용하여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 독립 만세'를 힘껏 외쳤다. (중략) 28일에는 1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류리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고...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3.1운동 [三一運動]

고 신명교회, 새터교회, 남부교회, 구로은강교회, 디딤돌교회, 이웃교회 등 이른바 민중교회³⁾들이 합법적 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민중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 탁아소와 지역 공부방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민중교회들은 개별 교회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로지역 민중교회운동연합(구로민교)이라는 지역 연대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1983년 12월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유화국면에서 민청련, 민통련 등 공개적인 민주화운동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로에서는 1985년 구로동맹파업⁴⁾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서울노동운동연합⁵⁾,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1986년에는 박영진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합니다. 1987년 6월항쟁 후 저항성이 강한 공개 사회단체들이 구로지역에 생겨납니다.



▲ 1993년 구로노동자문학회

한국여성노동자회⁶⁾(1987~현재),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⁷⁾(1987~현재), 구로노동자문학회⁸⁾(1988~2006),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구로지부(1988~현재), 한벗독서회(1988~1997),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구로노동상담소⁹⁾(1989~1997), 노동인권회관¹⁰⁾(1989~1999),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구로지부(1990~1994), 다우리노동자회관(1992~1997), 서울진보청년회(1994~1998) 등... 1990년대 초

3) 1987년에는 10개의 교회가 결합.

4) 1985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구로지역의 민주노조들이 노조탄압에 맞서 벌인 동맹파업과 지지연대 투쟁. 5개 사업체에서 약 1,400여 명의 노동자가 동맹파업을 벌였고, 5개 사업장에서 지지연대투쟁을 벌여, 총 2,500여 명의 노동자가 투쟁에 참여.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노동자 정치투쟁으로 노동자들이 기업별노조의 틀을 뛰어 넘어 정치적 연대투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음.

5) 1985년 8월 25일 노동자연대투쟁연합,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 구로지역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등 4개 조직을 연합하여 서울노동운동연합으로 출범. 1986년 사실상 와해. 서울노동운동연합의 결성을 주도한 사람은 김문수, 심상정, 박노해 등이었으며, 이 밖에도 여러 노동운동가들과 유시민, 백태웅 등 학생운동 출신들도 합류.

6) 영등포에서 창립하여 1989년 구로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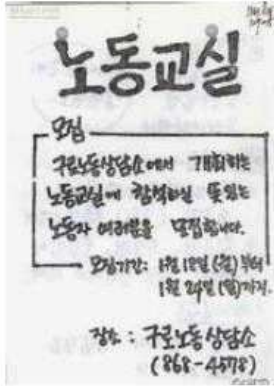
7) 영등포에서 창립하여 구로로 이전.

8) 1988년 6월 25일 실천문학사의 재정 지원과 전태일기념사업회 등의 도움으로 구로노동자문학회 설립. 노동자문학회는 구로를 시작으로 영등포, 인천, 부천, 마산, 창원, 울산 등지에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줄지어 생겨나 한때는 전국에서 10여 개가 넘는 단체가 활동하였다. 특히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냈던 계간지 『살글』은 노동자 참여 문학의 큰 축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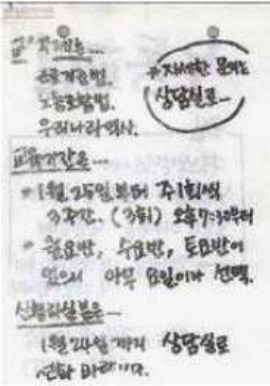
9) 서울노동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후배들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11월 13일 설립. 1992년 11월 서울노동운동연구소와 통합하여 구로노동연구소로 재탄생.

10) 1989년 부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이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권인숙의 변호를 담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및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금 마련 그림 전시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구로구에서 설립되었던 노동자 인권 옹호 단체이나 1999년 6월 용산구 남영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에는 20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활동했습니다.



구로노동상담소 노동교실 홍보물(자료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97년 구로노동상담소 노동교실 (자료제공: 전 구로노동상담소장 이봉우)

이 구로지역의 민주노동단체들은 구로지역민주노동단체연대모임¹¹⁾(미상~1991), 구로지역민주단체협의회(1992~1994)로 모여 연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식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일정 진전됨에 따라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눈높이를 바꾼(?) 소위 시민운동이 등장합니다. 시민운동의 등장은 사회운동의 자기 발전, 분화라는 내재적 요인과,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사회주의 진영의 후퇴, 경제적 성장, 사회의 다양한 분화 등 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시민운동은 정권과 전면전 형태로 진행된 기존운동 대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사회운동의 대중적 토대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중반 사회운동진영에 지역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구로지역사회운동도 일정한 변화와 분화가 시작됩니다. 구로공단의 변화와 민주노총.진보정당의 등장도 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89년 구로로 이전해 온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어린이집, 방과후학교를 만들고 어머니교실, 주부대학을 개설하였으며 1992년 서울여성노동자회¹²⁾로 이름을 바꾸고, 1995년 당시로서는 드물게 비영리 사단법인

11) 구로지역 민주노동단체 연대모임이 주축이 되어 운영한 프로그램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연대 모임에 포함된 단체는 구로상담소, 남민청, 구로노동자문화회, 참뜻노동자학교, 관악지역 노동자협의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자종합학교, 두레방 주민도서관, 서울노동자학교, 구로노동자연합, 노동인권회관, 산들노동문화원, 서울노련준비회 등 13개 단체가 속해 있다.

으로 등록합니다.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구로지부는 1992년 구로겨레사랑주민회를 거쳐 1998년 열린사회구로시민회로 개편합니다.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1992년 구로청년회로 이름을 바꾸고, 1995년에는 내부에 지역사업부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서울진보청년회¹³⁾는 1995년 구로 지역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1996년 구로지역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지역 연대체인 구로지역민주단체협의회 또한 1995년 ‘지역활동’을 내걸고 구로사랑민주협의회로 재편하고 연구집단(?)으로 구로지역발전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여 지방선거에 도전합니다.

다우리노동자회관과 한벗독서회 등 7개 단체는 풀뿌리지역시민운동단체로의 통합적 변화를 모색하여 2년간의 추진 끝에 1997년 지방자치·마을공동체·시민교육·환경·복지·문화·평화통일사업을 하는 종합형 지역시민단체로 구로시민센터를 창립합니다.

1998년에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생활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자치운동을 연구하고 실천함으로 주민운동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주민운동연구소가 창립되어 푸른교실 운영, 지역정보화사업, 주민건강사업, 주민정치조직화사업, 구로생협 창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의 부문운동도 본격화되었습니다.

1994년 서울시 최초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인 다우리어린이집이 만들어집니다. 단위 지역 내 탁아교사모임을 통해 기간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사업과 연합행사, 교육 등을 진행하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보육운동가들은 대중성과 보육전문성을 고민하며 1997년 한국보육교사회¹⁴⁾로 전환합니다. 지역공부방들은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합니다.

구로공해대책위원회(1989), 녹원생협 등의 지역환경운동이 태동하고 푸른치과, 구로의원, 구로한의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약국 등의 지역보건의료운동도 진행되었습니다.

12) 1992년 7월 11일, 전국 조직인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창립되면서 조직명칭을 서울여성노동자회로 개칭.

13) 1998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과 진보정당 참여로 해산. 당시 회원 중 일부는 문화활동으로 다시 모여서 문화공간을 시작하였고, 중학교 방과후 밴드 수업 지도, 마을콘서트 개최 등 지역사회 문화사업 시도.

14) 현재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1988년 ‘건강의집’에서 주말진료활동을 시작한 대학생과 보건의료인들은 1991년 공동체약국인 우리네약국을 개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네약국이 10여년간 활동하여 모은 기금출연을 바탕으로 2000년 보건복지전문 시민단체로 구로 건강복지센터를 창립합니다.

구로시민센터의 ‘다우리어린이서점’, 서울진보청년회의 ‘이야기밥어린이도서관’ 등 책을 통해 어린이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고, 어린이, 학부모, 마을주민들의 호응을 받아 이후 작은도서관 관련 법과 지원 제도가 생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배꼽빠지는도서관 등 작은도서관으로 이어져 현재 구로에는 9개의 구립도서관과 18개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등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구로청년회가 모태가 되어 지역사회에 구로여성회, 구로푸른학교, 금천청년회 등의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구로여성회는 2003년 여성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여성단체로 문화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체험활동 그리고 여성들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여성환경운동단체인 여성환경연대의 지역조직으로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을 꾸준히 해 온 영상활동가들의 노력은 현재 구로마을TV로 이어져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주민들간의 새로운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고, 생활과 노동이 결합된 ‘생활협동네트워크’를 지향하며 구로민중의집이 창립하여 수요나눔밥상, 구로 FM, 공동체활동과 공간나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로혁신교육지구를 통해 마을의 교육 관련 콘텐츠를 성장시켜왔고, 이에 여성 사회적기업1호인 ‘아하!열린교육센터’를 시작으로 ‘지구인공정여행’ ‘도토리문화학교’ ‘놀이연구회 통통’ ‘놀이만세’ ‘드림하이’ 등 여성들이 중심이 된 교육, 여행, 놀이,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전문법인으로 나선 ‘학교너머더큰학교’는 청소년, 학부모, 마을, 교사의 네트워크

킹 및 민간의 독립성을 가진 단체활동을 통해 민관학 협치의 새로운 모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1년 민중연대 출범에 따라 지역의 일부 단체는 서울남부민중연대로 모여 활동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사안별 연대를 해오다 2008년 10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활동을 위한 연대조직으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 구로지역사회운동의 영향력과 성과

풀뿌리지역사회운동의 영향과 사회의 변화는 그 지역만으로 해석하거나 한정하기는 어려우며 우리 사회 전체의 흐름 및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촛불의 등장을 사회운동이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아무런 토대나 축적 없이 어느 날 아무런 근거 없이 불쑥 등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기의 사회운동이 주로 불의한 정권과의 전면전이었고 우리 사회의 일정한 민주화 진전을 가져왔다면, 이후의 지역사회운동은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린 영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큰잔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등장, 마을문고의 변화,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내 임의단체 임원회비 문제, 학교 내 어린이신문 폐지, 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교복 공동구매,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예산제, 중간지원기관의 등장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개별 사안으로는 파랑새나눔터의 형성, 구로초 앞 도로 구조 변경, 구로4동공영주차장 지하화 등이 있습니다.

서울형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의 등장이 사회운동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아직 상식으로 자리잡지는 못하였지만 협치제도의 도입, 교장공모제와 학교 내 매점의 변화 등도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은 점차 반대와 요구 중심, 대변형의 사회운동(여전히 유효)에서 책임과 대안모색도 병행하는 주인형의 사회운동으로 진화 중입니다.

4) 금천구 시민사회의 역사 및 현황

최석희(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구 시민사회 MAP

■ 개요

- 금천구 시민사회 운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 구로공단의 배후 단지로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야학과 민중교회, 노동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
- 금천구 분구 이전에는 노동, 교육,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성 짙은 이슈파이팅이 있었지만, 1995년 분구가 되면서부터는 금천구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노력들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금천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음.
- 2010년 민선5기 지방자치 선거 이후 서울시와 금천구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혁신교육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시범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에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센터 등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음.
- 서울시NPO 권역별 자원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등록된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리스트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부탁하였으나, 기존에 연결된 조직 이외에는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하였음.

■ 금천구 분구 이전 활동 - 80년대 뿌리를 둔 조직

(1) 새터교회(안0성 목사) (2) 돌봄살림치유공간 자리(김0온)

- 새터교회는 기독교민회에서 창립한 교회임.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먼저 개원(1987.03.07.) 하였으며 교회는 동년 11월 창립하였음. 어린이집, 공부방, 녹색가게, 청소년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음. 2014년 공부방과 새터어린이집을 모두 정리하고, 독산4동에 돌봄살림치유공간 자리를 열고 청소년지원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는까페 자리 운영과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서적, 문

화적, 예술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3) 살구여성회(박0희)

- 1989년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이 결성되고, 1990년 11월 10일 민중당이 창당되었음. 당시 민중당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역활동을 시작하였고 1991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김주숙 교수(현 명예교수)가 “살기좋은 우리구(금천구)만들기” - 살구여성회를 설립 하였으며 금천구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음. 주로 여성문제와 노인, 아동 등 복지영역의 활동에 주력하여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노인들의 문해교육을 위한 살구평생학교, 살구따뜻한밥집, 살구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4) 금천구 생협

- 1993년 금전한우물생협을 창립하여 생협활동을 시작하였음. 생협은 2011년 금전한우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시흥동에 자연드림 매장을 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운동과 교육, 공급을 하고 있음. 현재 금천구 보건소와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는 금전한살림생협에서도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구에 매장을 운영 중임.

■ 분구 이후 마을 활동

(5)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양0순)

- 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모임(살구여성회에서 모임을 가졌음)이었던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웃음’이 2002년 지속적인 독서환경과 정보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도서정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흥5동 은행나무 근처에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로 16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등 작은도서관협의회는 매년 10월 둘째주 산기슭공원에서 동화속책문화잔치를 개최하고 있음.

(6) 숲지기강지기(김0숙) (7) 민들레워커협동조합(김0숙)

- 숲지기강지기는 2004년경 환경관련 학습모임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생태교실, 감로천생태탐사, 한내천생태탐사 등 모니터링 활동으로 활동이 확대되었음. (사)생명의숲의 김혜숙을 대표로 선출하고 사무국장으로 김유선을 선출하면서 활동의 체계를 세웠음.
- 2013년 시흥5동에서 암탐우는마을만들기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사업이 확대되었음. 이후 노인들의 수공예 공방을 컨셉으로 민들레워커협동조합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민들레워커협동조합은 현재 금천구청 로비에서 카페와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8) 금천생태포럼(서0주)

- 2006년 12월 22일 (사)생명의 숲 호암산 프로젝트사업을 전담하였고, 사업 종료 후 관리운영에 주력하기 위해 살구여성회와 숲지기강지기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창립하였음. 이훈섭 경기대교수를 대표로 선임하고 서은주 (사)살구여성회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에 위촉하며 활동이 시작되었음. 현재까지 생태환경교육, 숲놀이 교육, 강사양성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9) 금천어린이큰잔치, 친구야 노~올자

- 2007년 이전에 어린이날 행사는 구로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전교조 초등교사와 진보정당, 노동조합, 마을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2007년 어린이날 행사를 금천체육공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음. 세월호사고가 난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5월5일 어린이날 당일 어린이큰잔치를 개최하여, 올해로 11회가 되었음. 어린이 큰잔치는 25개 단체가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연인원 2000여명의 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았음.

■ 민선 5기 출범 전후 시민사회 진영

- 민선 5기 선거를 전후로 금천에서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등이 창립하고 활동하고 있음.

(10) 산아래문화학교(김0선) (11) 금천교육복지센터(류0숙)

- 산아래문화학교는 ‘마을의 모두가 교육자이자 피교육자가 되는 마을 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놀이와 미디어, 뜨개질 등 문화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골목길에서 놀자축제를 개최하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어 금나래아트홀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며, “닭다”라는 마을잡지를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 2010년 금천구에서 교육복지 사업이 뒤늦게 시작(복지대상 아동은 많으나, 다른 구에 비해) 되었으며, 금천교육네트워크 소속의 단체(은행나무도서관,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금천생태포럼 등)들이 공동으로 “책밖으로 나온 예술활동”을 주제로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만나는 활동을 진행하였음. 2013년 금천교육복지센터가 설치되었고 산아래문화학교가 위탁단체로 선정되어 교육복지센터(독산3동 꿈꾸는 나무)를 운영하고 있음.

(12)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조0하) (13)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김0정)

- 2010년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하는 도시농업지도사 양성교육과정 1기를 수료한 교육생들이 모여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를 창립하였음. 이후 민선5기 들어서 대한전선부지에 설치한 한태텃밭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매년 금천구에서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금천구 초등학교에서 스쿨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강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사업부문을 특화해서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였음. 건농은 상자텃밭, 지렁이상자, 옥상텃밭, 정원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목공을 매개로한 공방을 운영하며 학부모, 학생, 주민대상의 목공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건농은 우리동네커뮤니티센터를 위탁받아 도시와 농민들을 이어주는 장터, ‘화들장’을 운영하고 있음.

(14) 금천교육네트워크와 (15) 금천아카데미

- 2010년 5월 제4회 금천어린이큰잔치, 친구야 노~올자를 마치고, 금천구 교육시민단체들이 상설적 모임으로 전환하자는 안을 제안하였음. 매달 월요일 어린이큰잔치 참여 단체를 돌아다니며 밥상모임을 진행하며 마을공동체와 교육문화 활동을 주제로 학습모임을 진행하고 그 성과로 금천교육네트워크를 결성하였음.

- 금천교육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중교육 사업을 논의하면서 시민단체 공동기획강좌로 금천아카데미를 진행하기로 하고 교육분야와 주민자치분야 그리고 지역언론 분야에서 4강씩 기획강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음. 그 결과 금천학부모모임, 마을신문 금천in이 창립 되었음.
- 교육 분야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사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혁명“을 주제로 2010년 10월~11월 4회에 걸쳐 금나래아트홀에서 대중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지역 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을 통(通)한다-시민기자학교’를 진행하였음. 주민자치분야는 주민참여 분야와 예산분석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민선5기 1주년 기념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교육나눔협동조합(오현애)을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음.

(16) 금천학부모모임(고0남)

- 금천아카데미 학부모교육을 마치고 학부모모임 결성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2월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금천학부모모임(회)를 창립하였음. 초대 강혜승 회장에 이어 김현미 회장이 역임 하였으며, 현재 고순남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창립 이후 매년 학부모강좌를 진행하였음. 학교폭력 문제가 부각이 되었을 때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평화샘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추진하였으며, 그 계기로 현재에도 초등학생 교사들 중심으로 평화샘모임이 운영되고 있음.
- 1,2기 초창기 멤버들의 자녀성장에 따라 현재의 회장체제로 변화 하였으며, 2016년 학부모회가 법제화 되면서 만들어진 금천초학회연(박영실: 초중등 학부모회회장단연합회) 등 학부모 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

(17) 마을신문 금천in(이0호) (18) 라디오금천(윤0숙)

- 2010년 금천아카데미 시민기자학교를 마친 후, 마을신문 시험판을 6개월 이상 발행하고, 정식으로 마을신문 금천in(대표이사 이명춘)을 창간해서 금천의 정론지를 표방하며 지금까지 신문을 발행하고 있음. 종이신문 분야를 넘어 청소년 영상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서 종이병이

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였음.

- 서울 마을미디어 사업의 라디오 분야 강좌로 금천의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라디오분야를 개척하였으며, 라디오금천(윤명숙)을 설립하여 금천지역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이끌고 있음, 음악방송과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음.

(19) 교육나눔협동조합(민0호) (20) 금천문화역사포럼(안0찬)

- 교육나눔협동조합은 “동네어른이 동네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친다”는 가치로 강사와 주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협동조합임. 2013년 1월,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하였음.
- 특히 금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두고 금천구 문화자산을 교육자원화 하는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아이들이 우리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우리동네 척척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투어와 금천스토리텔링, 금천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학습과 다양한 창의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향토사 연구와 보급을 위한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2013년 11월, 금천문화역사포럼 창립을 주도하면서 금천구의 향토사를 정리하고 문화유산을 복원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금천문화역사포럼은 현재 은행나무의 보존과 은행나무 당고사의 복원에 힘써 “정월대보름 은행나무 당고사와 주민한마당”을 6회째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밖에 단군전터 표지석, 정조능행차, 서울호암산성 정비, 시흥행궁 복원, 금천현대사(구로공단), 녹동서원과 단군전 등 금천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금천문화원과 함께 <금천지명유래>를 발간함.

(21) 금천사회경제연대(신0호)와 (22) 금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오0주)

- 2010년 금천구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고, 2011년 4월에 금천구사회적기업가네트워크를 창립하였으며, 2013년 2월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금사연)로 조직을 전환했음.
- 금천구는 금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다 2015년 8월 민간에 위탁하였으며, 금사연이 위탁을 받았음

-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과 교육·홍보지원, 사회적경제 동향 분석 및 조사 연구, 신규 모델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다양한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 사회적경제시장 형성 및 사회적자본 축적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22) 꿈지락네트워크와 청춘빨딩(박0준)

- 관악구와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꿈지락네트워크는 2012년 청년들이 만든 청소년교육문화그룹으로 출발했음. 2016년 금천구가 위탁받아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공간 '청춘빨-딩'을 오픈했음. 청년과 청소년, 미래세대가 '꿈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

(23) 금천교육네트워크에서 사)마을인교육(이0석) 으로 전환

- 2016년 3월 금천교육네트워크 정기총회에서 “**민에 의한 민의 지원과 민간진영의 책임있는 역할을 높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6년 12월 26일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안지성 이사장)을 창립하였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 위탁의 경우,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7년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안이 확정되었음.
- 2017년 6월 1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마을인교육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1일 주민자치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안지성 초대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사퇴해서 2018년 정기총회에서 오(0)에 이사장을 보궐 선출하였으며, 2019년 정기 총회에서 이0석 이사장을 선출하였음.
- 2019년 11월 금천구마을공동체 위탁단체로 새로이 사)마을인교육이 재위탁을 받았으며, 현재 협약체결을 준비 중임.

5) 동작구 시민사회의 역사 및 현황

김도은(사단법인 마음껏동작마을)

동작구는 지역운동의 역사와 전통이 강한 동네로 일제강점기에는 노량진청년회, 용흥청년회 등과 같은 자율적인 여러 청년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였음.

- 이들은 한편에서는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음. 1908년 일찍이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사립은로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은로학교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면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면민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함.
- 해방정국에서는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만인 1945년 8월 17일에 영등포청년단 조직에 참여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위원장 여운형)와 협력하여 치안 유지와 식량운반 등의 책임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도 함. 특히 흑석동의 경우 건준의 기초조직인 흑석정인민위원회를 1945년에 결성하여 발 빠르게 건국준비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1946년 4월 15일 동단위로는 최초로 흑석정민주청년동맹을 만들어 활동한 동네(영등포구 민청은 하루 전 결성)이기도 함.
- 비록 이후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아픈 현대사와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 하에서 자율적인 민간조직의 결성과 활동이 봉쇄되었지만, 위와 같은 역사와 전통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맞서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투쟁에 나섰던 성남고 학생들의 3.17의거, 중앙대·송실대생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도 함께 한 4.19혁명, 중앙대·송실대·총신대생들을 중심으로 박정희유신독재와 전두환군사독재에 맞서 벌인 반독재민주화 투쟁과 그 정점에 있었던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짐.

1980~1990년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1980년대 말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관악 동작지부, 1990년대 열린사회시민연합관악동작민주시민회, 2000년대 한살림관악동작지부 등의 활동과 사당동, 신대방동 지역 강제철거반대 운동 등이 주목됨.

- 하지만 이들 조직은 기본적으로 전국(서울)조직의 지부라는 점, 주로 관악구에 근거한 조직이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음.

2000년대

동작구의 역사에서 마을공동체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지역시민사회 단체의 형성은 2004년부터 활동한 희망동네(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가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음. 희망동네는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이후 동작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자율적인 주민단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면서 동작주민 페스티벌, 동작구의정감시단 활동, 저소득층공부방 사업과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동작구지역단체협의회 결성 등 선도적인 역할 수행.

- 2005년부터 시작된 평화나비축제를 매개로 2009년 설립된 <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은 여성·청소년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여성주의모임, 학교밖 청소년 지원활동 등을 통해 동작지역에서 자율적인 지역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본격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 2005년 사단법인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의 창립으로 다문화센터를 만들고 지원하는 기초적이 작업을 시작하며,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지원에 크게 기여함.

2010년대

동작구 지역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과 함께 표방한 마을공동체 재생 및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있음.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민사회단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됨.
- 2012년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조직인 <마음껏>의 탄생과 활동, 2014년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조직인 <마을넷 동그리>의 탄생과 활동으로 이어짐

동작구시민사회의 특징

1980~90년대 동작구의 시민사회운동은 관악구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동작구의 독자적인 시민사회가 등장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동작구로만 보면 시민사회운동의 역사가 깊지 않다. 하지만 동작구 내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이력은 짧지 않은 분들이 많다. 이러한 이력들을 바탕으로 2012년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 수 있었고 각 단체들의 연대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왔기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주제별 단체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2010년 이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교육혁신지구 등의 사업들이 쏟아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대거 지역 안에 등장 하였지만, 이러한 주체와 단체들을 결속시키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고, 2010년 이전의 결속력 보다 못한 상태로 시민사회운동은 산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함께할 수 있는 시민사회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결속와 토대 마련이다. 2019년 시민사회가 하나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시민사회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자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계속 진행 중이다.

6) 양천구 시민사회의 역사 및 현황

이복자(양천아이쿰생협)

양천구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목동과 신정동에 국가주도의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1988년 강서구와 분구가 되었다. 양천지역의 시민력이 크게 성장한 이후에도 강서구와 양천구의 단체와 시민모임은 연대기구와 공동단체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대단지아파트와 관공서 및 의료, 학원, 유통 등 생활 편의시설이 몰린 신정과 목동에 비해 신월지역의 개발과 교육의 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4만세대 가까운 주민의 인위적인 외부 유입과 베드타운과 신흥주거지의 성격이 강한 신설구(1988년)라는 형성조건 상, 격동의 1970,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사회운동 전체 혹은 부문운동의 치열한 생성·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발전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우리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1990년대에서야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시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 바탕이 당사자성 운동이었다.

1980년대 중반 목동지역 재개발과정에서 치열한 철거민투쟁이 있었지만, 이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중산층의 새로운 주민들로 대체되었고, 지역사회운동의 역사적 연계성은 소멸하였다. 공정감시선거단 중심으로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가 격동의 1980년대를 거친 1990년대 우리 지역 시민력의 바탕이다. 그러나 양천지역 회원들 대부분은 조직이 담보되지 않은 개인들이어서 **지역현안과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지역시민사회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하철노조와 지역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탈북자와 취약계층의 거주지역에 ‘은정지하철공부방’(1999)을 열었고, 이 사업으로 인해 ‘양천지역시민회’ 회원과 단체 활동가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부정기적이거나 비로소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양천구 시민사회의 두드러진 등장은 1996년 초등학교의 학교직영급식운동(1996)을 계기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교육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목동의 교육열기가 한창 높아지고 있던 90년대 후반이다. 1999년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를 만들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한 양천구의 박범진 의원 낙선운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역시 양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2000년대 이후 지금 양천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민사회의 지형은 이들 1980,90년대 사회운동 주류 세력의 전통성 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까지는 양천구 시민단체의 수 자체가 적박했다. 1990년대는 남서여성민우회(1994)와 강서양천여성의전화(1998)가 고유활동을 다져나갔다.

1990년대에 들면서 양천지역에 생협이 여러 개 생겨났다. 행복중심서남생협, 한살림서부지부, 별내생협(양천아이쿱전신) 등이 있고 이후 인드라마생협(2012)을 포함하여 4개 단체가 지역기반을 가지고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제정 운동(2008), 학교급식조례제정과 보육조례제정, 친환경무상학교급식운동(2010), 한미FTA반대와 광우병위험소고기 수입반대운동 등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생협은 이후 우리 지역 시민사회의 새로운 주역이자 핵심 자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양천지역에 장애인단체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2002)가 생기면서 ‘남서여성민우회’와 ‘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 함께 참여하는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를 주도하였다. 2010년 해체될 때까지 ‘장애인권영화제’ 등을 개최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에 장애인 인권 의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양천의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성, 소비자, 장애인 등 당사자 운동의 단체들이 근간을 이룬다.

또 하나의 흐름은 아동청소년 부문이다. 신시가지아파트 중심지역과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지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목동에선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2007)와 기린지역청소년센터(2008), 신정지역에선 여성민우회의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2009), 신월지역에선 성공회의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4곳이 생겨났다. 이후 양천아이쿱생협이 회원과 사업중심 지역을 뛰어넘어 신월과 목2동의 취약지구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당사자 운동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2010년대 들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대사회적 의제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정치와 생활상의 의제를 다루는 ‘양천생활자치네트워크’(2010년)를 결성하

였다.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양천아이쿵, 한살림, 행복중심 등의 생협과 지역아동센터나숲 등 7개의 단체회원 및 전교조 활동가 등 지역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진 몇 명의 개인회원을 포함한 단체로 출범한다.

마을을 가꾸는 주민학교와 목동마을도서관 매각반대운동은 어린이책시민연대와 주민들 지역사회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화의료원 부당노동탄압 중단 기자회견,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문제를 다룬 ‘의자놀이북콘서트’, 삼성전자서비스노조탄압에 맞선 지원시위, 선거캠페인 등으로 노동자연대 활동도 이어나갔다.

한편에서는 목2동에서 터를 잡게 된 청년주민들(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이 관의 도움 없이 지역주민들의 후원으로 출발한 모기동마을축제(2011)가 주목을 받으면서 주민의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서울시장의 서울형 마을공동체지원정책 사업이 펼쳐지는 환경이 주어졌다.

생활자치네트워크(2010)가 양천마을넷(2013)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울시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마을과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통해 풀뿌리시민력을 키우기 위한 양천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촉진하는 계기로 삼았다.

‘어린이책시민연대양천지회’, ‘은행정책마당’, ‘양천노동인권센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나눔과동행’, ‘(사)희망연대’, 장애인자조모임 ‘세울’, 대안학교 ‘내일새싹학교’, 위기여성과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내일의집’, 사람중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광범위한 부문의 시민단체들이 마을네트워크에 합류하였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룹의 일부가 추가로 합류하였다.

2013년 하반기에는 양천마을넷이 주축이 되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의 제 단위와 함께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를 출범시켰다.

2014년, 민선6기 새로운 구청장 체계가 출범하면서, 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바람을 실현할 열린 공간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 구청장정책기획단, 부문별 혁신기획단에 참여하면서 민관의 상호이해와 파트너십을 높이는 계기를 맞았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단위들의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체계 만들기를 본격화하였다.

양천지역 시민사회는 현재 마을의 활동자원들을 최대한 가동하여, 가능한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다. 마을공동체생태계지원단(2014),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사업지원단(2014), 이후에 법인단체로 전환한 양경사협과 (사)양천마을이 각각 양천경제통합지원지원센터(2017)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2018)를 수탁하였고, 찾동(2016), 신월생태계건강기반조성사업단(2016), 시민협력플랫폼(2017)을 갖추었다. 양사경협의회가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2015)으로, 마을넷이 사단법인양천마을(2018)로 전환한 것은 이후 사업 수탁기관으로서의 책임단위를 분명하게 하고 안정적인 논의구조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대응이었다. 2017년 양천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을 계기로, 활동가 워크샵에서 양천시민사회에 공익활동지원조직의 필요가 제기된 바 있고, 양천시민사회 전체의 현 지점을 진단평가하고 전망을 세우는 구체화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또, 2012년 이후 지역사회에서 부각된 민관협치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양천 아이쿱생협, 행복중심생협, 남서여성민우회 등의 단체들은 고유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가를 배출하고 조직적으로 결합하며 활동영역을 넓혔다. 시민자치학교, 구정모니터링 등으로 생활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출발한 은행정책마당은 풀뿌리주민커뮤니티와 단체들을 위한 공간나눔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리고 재미누리협동조합, 나눔교육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뉴스 Y’, ‘좁은네거리’ 등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마을미디어, ‘양천상상마을’로 대표되는 청년 커뮤니티의 등장 등 마을경제의 토대가 될 건강한 시민사회 주체들이 성장하고 있다.

7) 영등포구 시민사회의 역사 및 현황

이용희(사단법인 영등포마을)

1950년대~1980년대

일제 말 영등포는 경인철도의 교통체계, 한강변의 풍부한 공업용수로 인해 재래시장에서 대규모 공장(밀가루, 설탕, 면직)까지 중상공업이 발전한 곳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정착하는 곳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문제의식을 느낀 영등포산업선교회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주로 서울 알렌스키의 주민조직론과 해방신학을 기반)와 뜻있는 목사들이 모여 산업선교를 시작했다. 공장을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공장교회를 설립하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으며, 1973년 조지송, 인명진 목사의 부임과 함께 노동자 소모임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 기반 한 노동조합운동의 학습의 장이자 문화센터, 생활자조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민주노동조합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결합하여 반독재 세력의 중심부로 자리 잡았다. 이후 정권의 탄압으로 조지송, 인명진 목사 투옥, 주요 활동가 연행 및 사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

1980년~1990년대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민주노동운동은 영등포내 산업의 변화(대규모 공장의 이전), 민주노동운동의 합법화로 그 영향력이 줄어든다.

1990년~2000년대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운동이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대학생 중심의 대안과 연합하여 협동조합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 다람쥐회, 서로살림생협, 서울의료생협, 밝은 공동체 (활동가 공동육아)가 자리를 잡는데 일조한다. 협동운동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역에서부터 바꾸어 보자는 가치를 내걸고 협동조합간 네트워크, 협동학교 (활동가 양성과정)를 진행하며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곳이 된다.

2000년대~2011년대

영등포내 대안학교로 하자센터가 열리고 이들 졸업생들의 사회적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관계망들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노리단, 오가니이션 요리, 트래블러스 맵, 리블랭크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가 및 사회 활동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문래동 노후화

된 철제공장에 예술가, 문화기획자, 점거 활동가 등이 하나둘 모여 그들만의 문화지구를 만들어 갔다. 영등포내 지역활동가(진보정당, 협동조합, 여성운동, 생태운동, 지역노조, 환경운동)들이 산업선교회 협동사업부를 중심으로 매달 한번 만나 밥을 먹는 목요밥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에 같은 목소리로 대응하게 되었고 학교 통학로 문제, 난개발 문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역생활의제에 구청과 다른 의견을 내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2012~2017년대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지역현안에 대해 더 깊이 개입하고 더 많은 시민과 조우할 수 있는 단위를 고민하게 되었다. 2012년 목요밥상에 참여하는 단체 중 지역의제 중심으로 고민하는 단체들이 모여 영등포 마을넷을 결성하고 이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분야에 주요한 민간파트너로 구청과 협력하게 되었다. 2017년 이후 목요밥상은 카페봄봄으로 이전하여 계속 진행 중이고 영등포 마을넷은 느슨한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사단법인 영등포마을을 설립하게 된다. 영등포구 마을지원센터 운영, 혁신교육지구의 틀 마련, 각종 지역 활동가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8년~2019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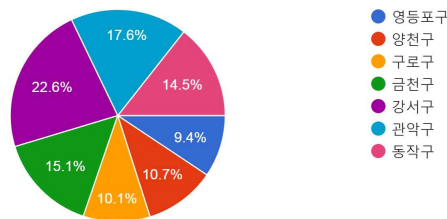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을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개인의 지원과 후원을 모았다. 2019년 10월 타임스퀘어에 소녀상을 제막하게 되었고, 이후 후속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Ⅲ. 서남권 단체 현황 및 특성 분석

1. 서남권 NPO 단체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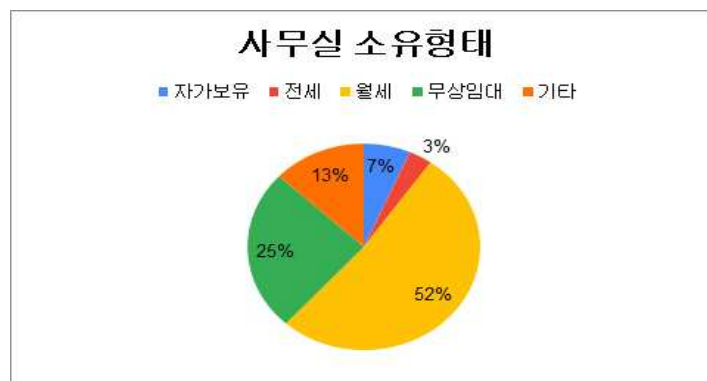
■ 해당 자치구가 어디신가요?

해당 자치구가 어디신가요?
응답 159개



서남권 7개 자치구의 조사 연구는 단체를 기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159개의 단체가 응답하였으며, 강서구 22.6%, 관악구 17.6%, 금천구 15.1%, 동작구 14.5%, 양천구 10.7%, 영등포구 9.4%로 확인된다. 지역간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서남권을 분석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무실 소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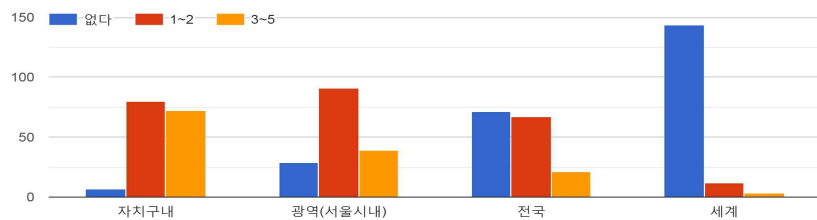
사무실의 소유형태 중 1순위는 월세 52%(80개), 2순위 무상임대 25%(39개), 3순위 기타 13%(20개), 4순위 자가보유 7%(10개), 마지막으로 사무실 없음도

3%(5개)로 나타났다. 부동산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52%의 단체가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단체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월세 부담은 추후 다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타로 나타난 부분은 고정적 혹은 비고정적으로 공간을 췌어하거나 개인의 집을 주소지로만 둔 경우 등 다양하다. 무상임대가 25%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무상계약기간의 안정성은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는 자치구와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난다.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도 1~2개 정도의 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치구 내에서는 1~2개 또는 3~5개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에서는 1~2개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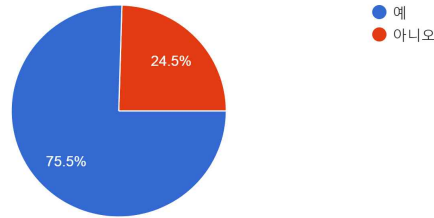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자치구,광역,전국범위)



반면 전국 단위나 글로벌 단위와의 네트워크가 없거나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풀뿌리 NPO가 조직에 강점을 가진다면, 전국 단위 또는 글로벌 단위 NPO는 의제 관련 전문성이 있다. 정책의제 수립 지원이 서남권 NPO센터의 주요 역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제 해결 역량까지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권역을 넘어 의제별 전문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민간위탁 혹은 공모(보조금)사업을 진행 중인가요?

민간위탁 혹은 공모(보조금)사업을 진행중인가요?
응답 1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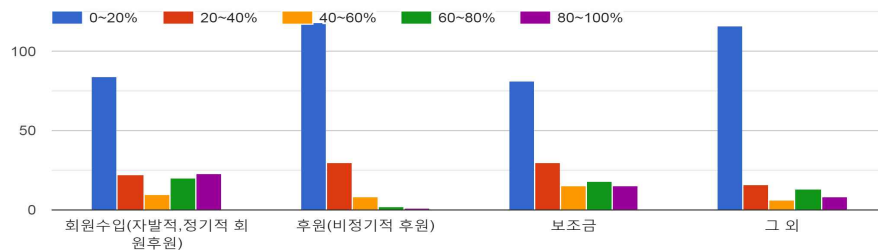


보조금 사업은 전체의 75.5%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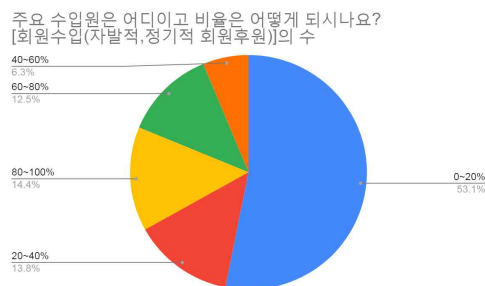
뒷부분에 협치와 관련된 분석도 있지만, 이런 빈도가 최근 협치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함께 늘어난 것인지, 이전에도 이 정도의 참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모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 주요 수입원은 어디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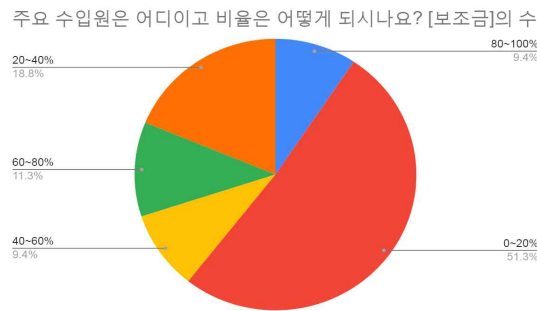
주요 수입원은 어디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체의 주수입원은 정기적 회원수입, 비정기적 후원수입, 보조금, 그외의 부분 모두 0~20%의 범위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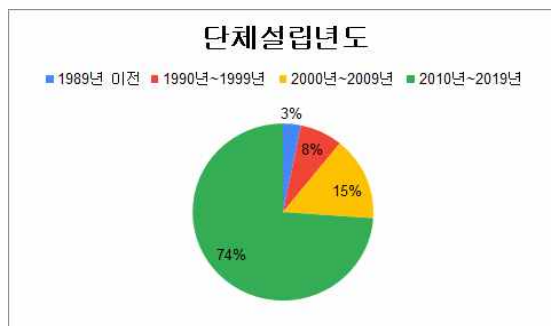
단체의 자립도를 나타내는 회원수입 중 정기적 회원수입이 전체의 80~100%인 단체가 14.4%로 나타났지만, 이는 주로 재정규모가 작은 단체이거나 도서관, 한부모, 대안교육, 노동, 종교 등 회원 기반이 명확한 단체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보조금이 전체사업비의 80~100%인 단체도 11.3%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적 미션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센터를 수탁받고 있는 모기관으로 보여진다. 0~20%범위에 고른 빈도가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단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단체 설립년도

2010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가 74%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2010년 이후 마을공동체활동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단체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990년~1999년 설립된 단체는 12개이며, 1989년 이전 설립한 단체는 5개 정도인 것을 볼 때 단체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 단체 상근자 수



단체 상근자 수는 1명~2명인 곳이 37%(58개)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는 3명~5명으로 25%(40개), 3순위가 상근자가 없는 곳으로 23%(37%)로 나타났다. 10명 이상의 단체도 7%(11개)지만,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생협, 자활, 사회복지단체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단체 상근자가 없는 곳이 23%(37개)나 되고 1명~2명인 단체도 37%(58개)이다. 상근자 2인 이하의 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85개)라는 사실은 단체가 일상적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어진다.

■ 단체 회원 수

단체 회원 수는 0명~50명이 55%(88개), 51명~100명 14%(22개), 101명~200명 19%(30개)로 회원수 100인 이하의 단체가 69%(110개)로 나타났다. 501명 이상의 단체는 주로 협동조합이므로, 단체의 규모 또한 열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 단체 재정규모(1년 운용 자금)

1년 운용 재정규모는 1순위 1,000만원 이하 31%(48개), 2순위 1,001만원~5,000만원 25%(39개), 3순위 10,000만원 이상이 27%(43개)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하의 단체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남권NPO의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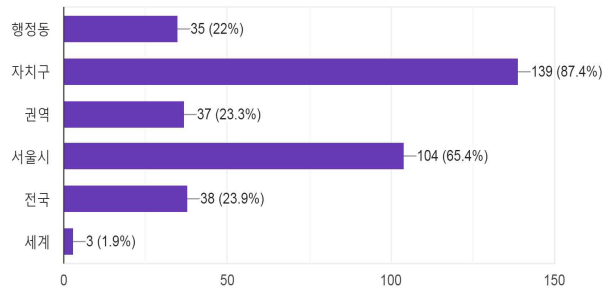


보여주는 지표이다. 10,000만원 이상의 단체는 센터수탁 모기관, 생협, 사회적 협동조합 등 이어서 단체와는 차별성이 보여 진다.

■ 활동범위(중복선택가능)

활동범위 (중복선택가능)

응답 1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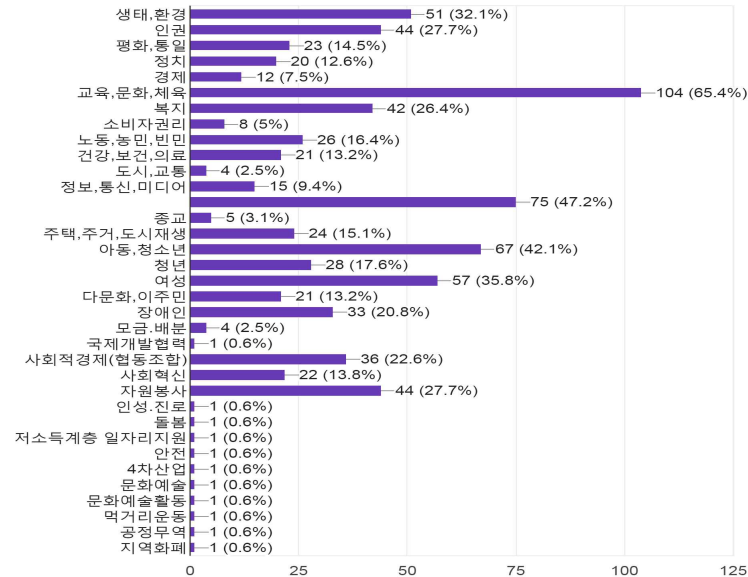


중복선택이 가능했던 활동범위의 경우 자치구 87.4%(139개), 서울시 65.4%(104개), 전국 23.9%(38개), 비슷한 규모로 행정동이 22%(35개)였다. 대부분의 단체가 지역기반의 활동을 한다는 것은 풀뿌리 자치의 측면에서도 소중한 자원이다. 이런 단체들이 성장하여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 진다.

■ 활동분야(중복선택 가능)

활동분야(중복선택 가능)

응답 1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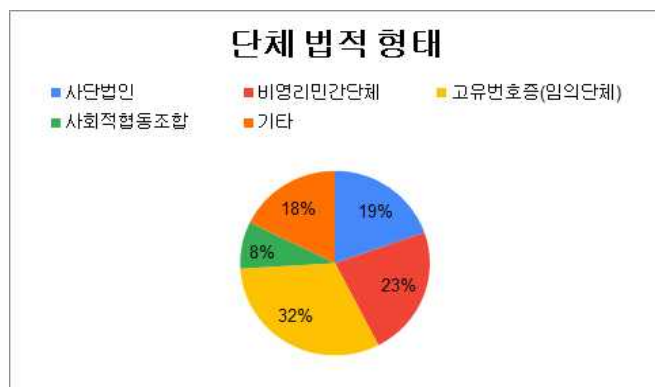


활동분야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1순위 교육 문화 체육, 2순위 주민자치 풀뿌리 마을공동체, 3순위 아동 청소년, 4순위 여성, 5순위 생태 환경, 6순위 인권과 자원봉사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단위의 활동이 많은 비율로 나타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주민의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단체 법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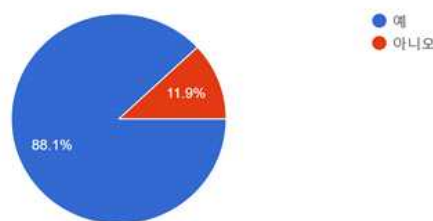
단체의 법적 형태는 임의단체(고유번호증) 32%(51개), 비영리민간단체 23%(36개), 사단법인 19%(30개), 기타 18%(29개), 사회적협동조합 8%(13개)로 나타났다. 기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별로 조사 단체의 범위가 달라 포함하지 않았던 자활, 복지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이 소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NPO를 지향하는 공동체 등을 지역상황에 맞추어 조사하는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이해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 권역 내 단체들 간 비정기적(정책제안, 구정 대응, 축제, 포럼 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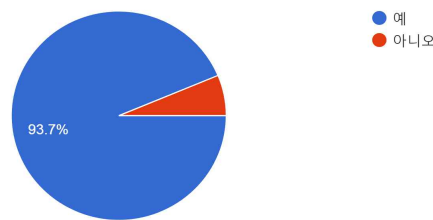
권역내 단체들간 비정기적(정책제안,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응답 159개



권역 내 단체들 간 네트워크와 연대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88.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자치구 내 단체들 간 비정기적(구정 대응, 축제, 포럼 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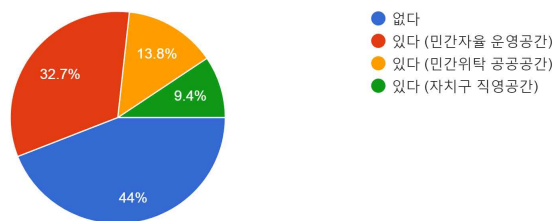
자치구내 단체들간 비정기적(구정 대응, 축제, 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응답 159개



자치구 내 단체들 간 협력의 경험 역시 93.7%로 상당히 높게 분포되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활동이 많은 것도 이런 결과와 연결되어 보인다.

■ 자치구 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자치구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응답 1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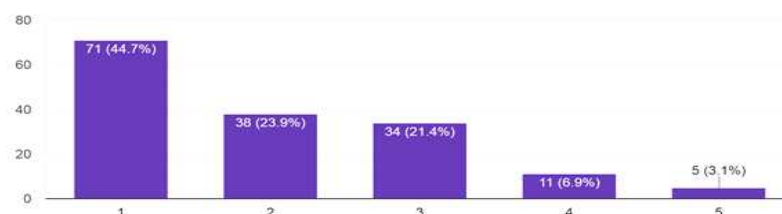
자치구 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순위로 없다 44%(71개)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주 놀랍다. 공유공간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한 공유공간이 300여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에도 지속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다는 답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모순될 수 있다.

그러나 NPO가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 행정이 규정하는 공유공간과 NPO가 규정하는 공유공간은 다를 수 있기에 실제 300개가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NPO지원정책이나 예산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처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생각할 때 NPO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와 지원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용하는 공간 중 민간자율 공간이 32.7%(52개)로 2순위이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민간 자율공간이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NPO이용공간이라는 단어의 낯설음을 이야기한다. 스스로를 NPO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NPO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발생한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 자치구 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구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응답 159개



자치구 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44.7%(71개)가 가장 낮은 1점을 주었으며, 2점도 23.9%(38개)로 나타났다. 68.6%(109개) 즉, 3단체 중 1개의 단체는 지원사업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중간지원조직 간 또는 중간지원조직과 단체 간 소통채널의 부족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정보가 집중되는 중심 창구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시민사회 NPO단체들을 소통하고 지원하는 플랫폼 같은 단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보조금 사업이라는 익숙한 용어와 NPO지원이라는 낯선 용어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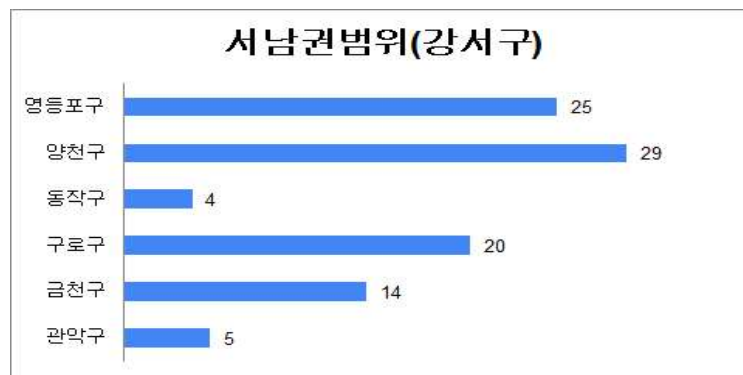
위의 문항과 이 문항을 통해 NPO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스스로 NPO이면서 NPO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재정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 본인 생각에 서남권이라고 하면 어느 자치구를 포함하나요?

(중복 선택 가능)

* 서남권의 범위에 대한 자치구별 인식은 중복응답으로 처리하고 각각의 자치구를 하나로 간주하여 서남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응답자 숫자로 처리하였다.

강서구



강서구는 전체 36명 응답 가운데 양천구(29명), 영등포구(25명), 구로구(20명), 금천구(14명)를 서남권으로 여기는 반면 관악구(5명)와 동작구(4명)에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관악구는 전체 28명 응답 가운데 동작구 26명, 금천구 25명, 구로구 2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등포구(13명), 양천구(13명), 강서구(11명)에는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구로구는 14명 응답자 전체가 금천구를 서남권으로 인식하는 사례이다. 영등포구 12명, 양천구 10명, 강서구 9명, 동작구 8명, 관악구 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악구가 구로구를 가깝게 느끼는 것과 비교하여 구로구는 관악구를 7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멀게 느끼는 특성이 나타난다.

금천구



금천구는 전체 24명의 응답자 가운데 구로구 21명, 관악구 20명, 영등포구 17명, 동작구 15명, 양천구 13명, 강서구 11명의 순으로 답하였다. 양천구와 강서구를 상대적으로 약간 멀게 느끼는 것으로 보여 진다.

동작구



동작구는 전체 23명이 응답하였고, 관악구(21명)와 영등포구(17명)가 높게 나타난다. 관악구 역시 동작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영등포구는 동작구를 서남권으로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적었던 것과 비교하여 상반된 결과로 보여진다. 다음 순위로 구로구 14명, 금천구 13명으로 나타났으며, 강서구와 양천구가 각각 7명으로 낮게 나타난다.

양천구



양천구는 전체 17명의 응답자 가운데 강서구가 1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구 9명, 금천구 8명, 영등포구 7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관악구와 동작구는 각각 1명으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악구나 동작구가 느끼는 거리감보다 양천구가 관악구와 동작구를 서남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낮다.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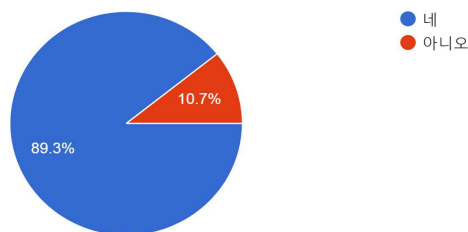


영등포구는 전체 15명의 응답자 가운데 구로구 14명, 금천구 11명, 양천구 11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관악구 6명, 강서구 5명, 동작구 5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서구가 영등포구를 가깝게 느끼는 것과 달리 영등포구는 강서구를 서남권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적다는 것은 특이하다.

자치구간 인식 차이와 관련하여 영등포 활동가는, 영등포는 문래동 쪽에 활동하는 단체가 집중되어 있고, 동작구와 접한 신길지역에 단체 활동이 적으므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실제 동작은 신길과 가까운 보라매나 상도에서의 활동이 많아서 영등포와 가깝게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 다른 인식을 가진 구로, 관악, 강서 등의 지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서남권 내 NPO 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응답 1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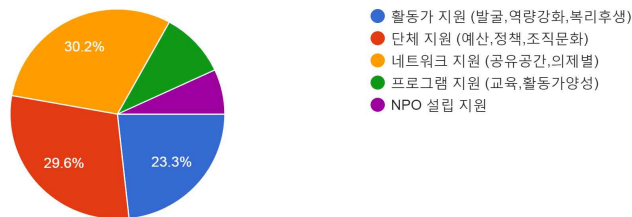


서남권 내에 NPO지원센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9.3%(142개)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필요없다고 한 답변의 이유를 살펴보면 자치구단위의 센터가 있어

야 한다, 서남권의 범위가 너무 넓다, 기존 중간지원조직과의 중복이 우려된다 라는 답이 많았다. 필요없다는 답변의 일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NPO지원센터를 원하는 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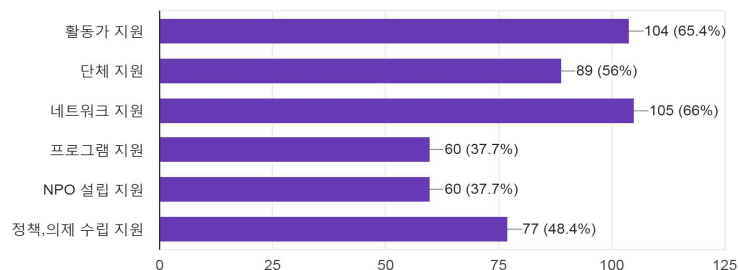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응답 159개



서남권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공유공간이나 의제간 네트워크 지원이 30.2%(48개), 예산, 정책, 조직문화 등 단체 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단체 지원이 29.6%(47개), 활동가 발굴, 역량강화, 복리후생 등의 활동가 지원이 23.3%(38개)로 골고루 나타났다. 프로그램 지원도 약 10%(16개)가 나타나고 있다. NPO 설립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중복 선택 가능)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응답 15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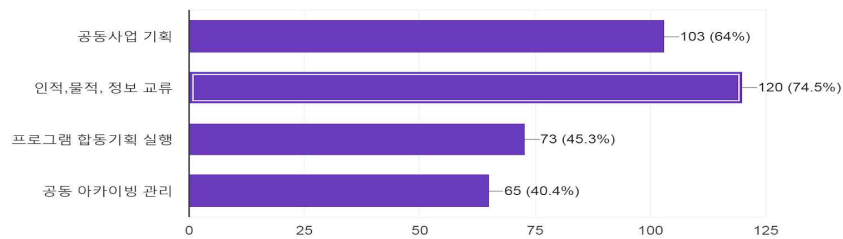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은 중복선택이 가능하게 하였다. 전체 대비 응답자 각각의 비율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지원 66%(105개), 활동가 지원 65.4%(104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 지원 56%(89개), 정책의제 수립 지원이 48.4%(77개)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지원과 NPO 설립 지원도 각각

37.7%(60개)로 적지 않다. 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지원을 원하는가와 비교하여 보면 네트워크 지원, 단체 지원, 활동가 지원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NPO지원센터 설립 등은 역할과 필요에 있어 약간의 격차가 있어 보인다.

■ 서남권 내 NPO 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선택 가능)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선택 가능)
응답 161개



*마감이후 들어온 2개의 단체를 뺀 159개를 분석하고 있는 도중, 오류로 그래프가 사라져 이 자료는 161개 데이터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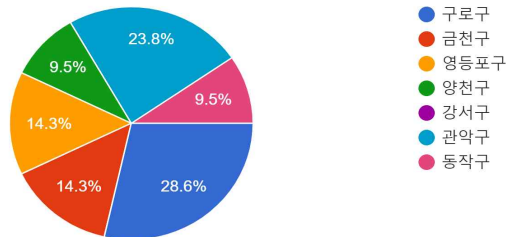
서남권NPO지원센터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인적, 물적, 정보 교류가 74.5%(12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사업 기획이 64%(103개)였으며, 프로그램 합동기획 실행 45.3%(73개), 공동 아카이빙 관리 40.4%(65개)로 나타났다. 위의 문항들과 비교하여 서남권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서남권 네트워크 현황 및 특성 분석

서남권 네트워크 설문정리 (응답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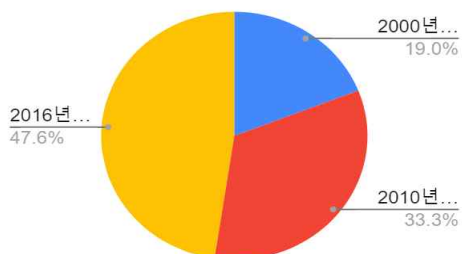
해당 자치구가 어디신가요?

응답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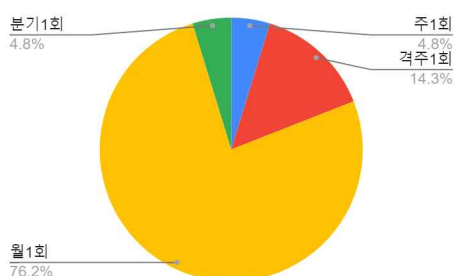
구로구 6개, 관악구 5개, 금천구, 영등포구 3개, 동작구, 양천구 2개, 강서구 0개로 조사되었다. 구로와 관악이 활동 중인 네트워크가 많고, 타구는 2~3개 정도의 네트워크가 활동 중이다.

■ 네트워크 설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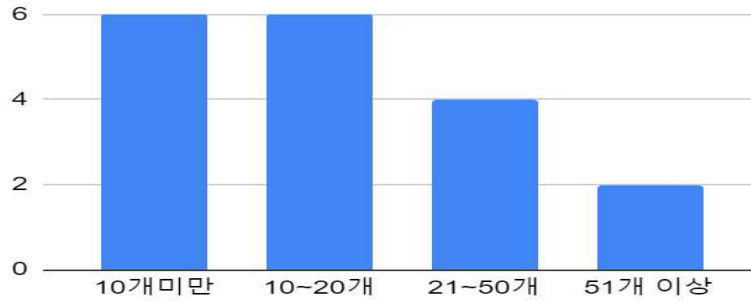
2000년~2004년 4곳, 2010년~2015년 7곳, 2016년 이후 10곳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네트워크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고, 특히 2016년 이후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협치사업의 영향으로 다양한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촉발되지 않았나 한다.

■ 네트워크 정기모임 횟수



주 1회 1곳, 격주 1회 3곳, 월 1회 16곳, 분기 1회 1곳의 정기모임을 가지는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월 1회 만나서 회의를 하는 곳이 제일 많고 주로 그 정도 기간의 공유와 활동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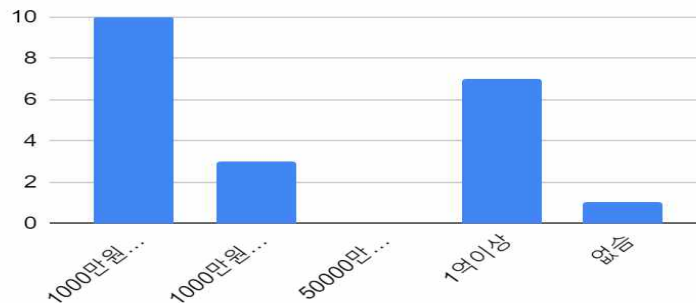
■ 네트워크 참여단체 수



네트워크 참여단체 수가 10개 미만인 곳이 6곳, 10~20개가 6곳, 21~50개가 4곳, 51개 이상이 2곳이다. 기타로는 단체의 네트워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있다. 자치구별 네트워크이므로, 20여개 이하의 주체들의 모임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 재정규모

1년 재정규모가 1000만원 이하인 네트워크가 10개, 1000만원~5000만원이 3개, 5000만원~1억은 없고 1억 이상은 7개이다. 1억 이상이라고 응답한 곳은 주로 수탁사업의 총 예산을 합친 결과로 보인다. 수탁사업의 경우 단일 단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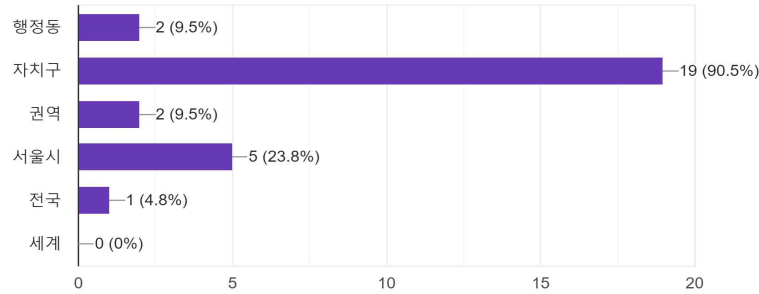
아닌 자치구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는 곳이 많이 생겨난 결과인 듯하다. 그렇지 않은 곳은 주로 1000만원 이하로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 활동범위

네트워크 활동범위는 주로 자치구 내에서 활동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권역보다는 광역 네트워크로 활동하는 곳이 더 많다. 이후 권역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활동 범위

응답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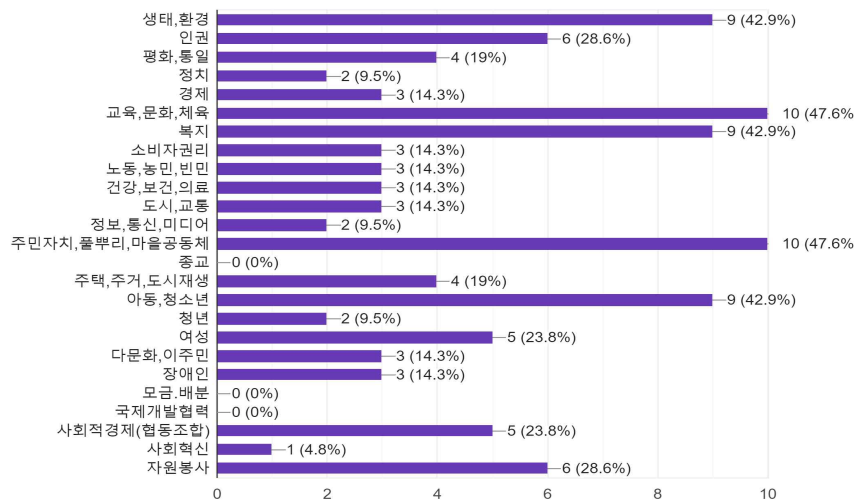


네트워크의 성격상 조직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주로 고유번호증 정도만 가지고 그 대표성을 띠고 활동 중이다. 실제 고유번호증도 없이 활동하거나 준비 중이거나 필요를 느끼지 않는 네트워크도 상당수다.

■ 활동분야

활동분야(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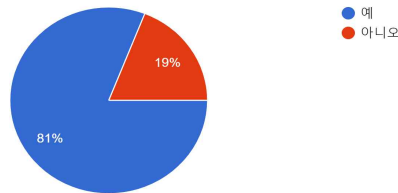
응답 21개



교육, 문화, 체육, 주민자치, 풀뿌리, 마을공동체 분야가 많고 그 다음으로 생태, 환경, 복지, 아동, 청소년 분야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분야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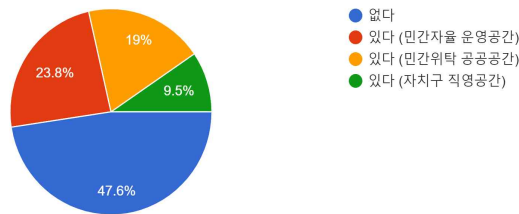
■ 권역 내 단체들 간 비정기적(정책제안, 구정대응, 축제, 포럼 등) 협력 및 연대 사업이 있었나요?

권역내 단체들간 비정기적(정책제안,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응답 21개



■ 자치구 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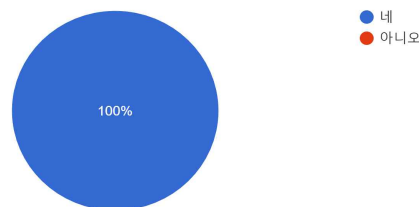
자치구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응답 21개



네트워크가 공유하는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47%인 것으로 보아 자치구내 편하게 이용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은 듯하다. 있더라도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공간이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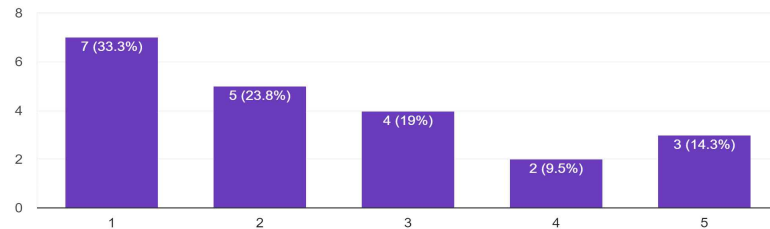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응답 21개



네트워크 전체가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다.

■ 자치구 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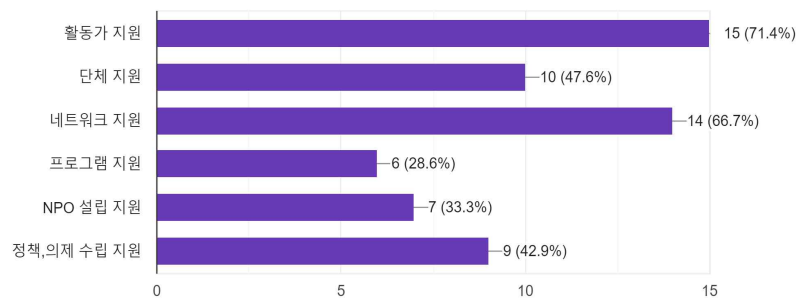
자치구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응답 21개



네트워크도 개별 단체와 비슷하게 자치구 내 NPO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잘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곳이 3곳이나 있는 것은 수탁사업을 하면서 좀 더 지원사업 정보에 가까워진 결과가 아닌가 한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응답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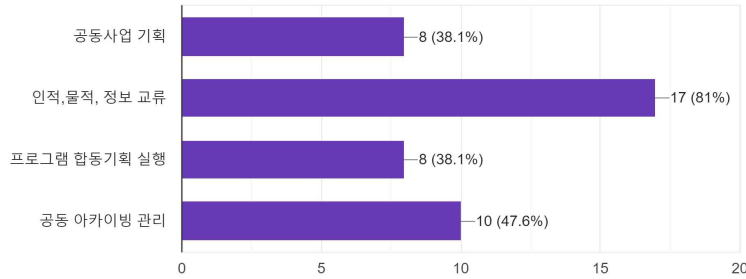


NPO지원센터에 바라는 역할은 개별활동가 지원과 네트워크 지원이 가장 높게 나왔고, 반드시 필요한 요청사항은 단체 지원이었다. 직접적인 지원은 단체에, 간접적인 지원과 협력하고자 하는 역할은 활동가와 네트워크에 집중했으면 한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선택 가능)

응답 2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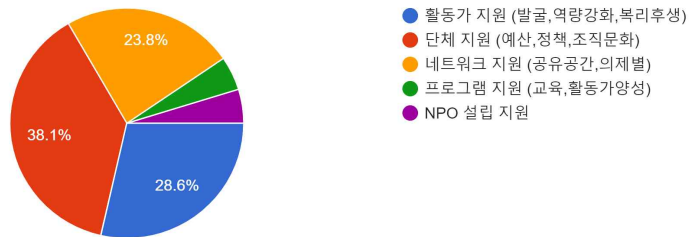


권역과 해당 자치구의 관계는 주로 인적, 물적,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두었고, 공동으로 아카이빙을 관리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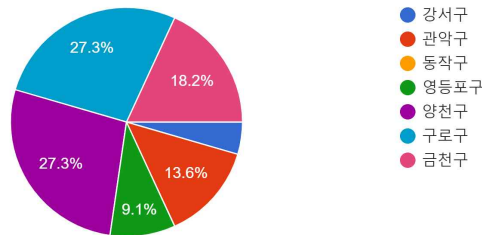
응답 21개



3. 서남권 중간조직 현황 및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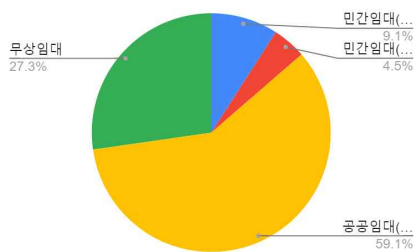
서남권 중간지원조직 설문정리 (응답 22개)

해당 자치구가 어디신가요?
응답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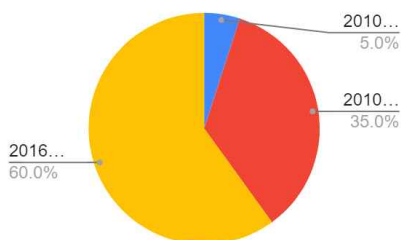
양천구, 구로구 6개, 금천구 4개, 관악구 3개, 영등포구 2개, 강서구 1개로 22개 중간지원조직이 조사되었고, 동작구는 0개이다.

■ 사무실 소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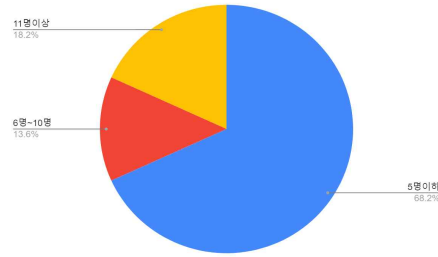
민간임대(월세) 2곳, 민간임대(지원) 1곳, 공공임대(구,시지정) 13곳, 무상임대 5곳으로 조사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의 특성상 공공이 임대부분을 많이 책임지고 있고, 무상임대도 5곳이나 있었다. 민간이 월세부담을 지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직 설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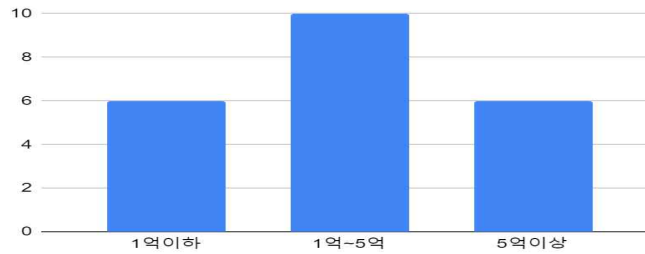
2010년~2015년 7개, 2016년 이후 12개로 주로 2012년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중간지원조직의 형식과 활동이 자치구별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상근자 수



중간지원조직의 상근자는 5명 이하가 15곳, 6~10명이 3명, 11명 이상이 4명이었다. 주로 5명 이하가 많지만, 11명 이상이 상근하는 대규모 중간지원조직도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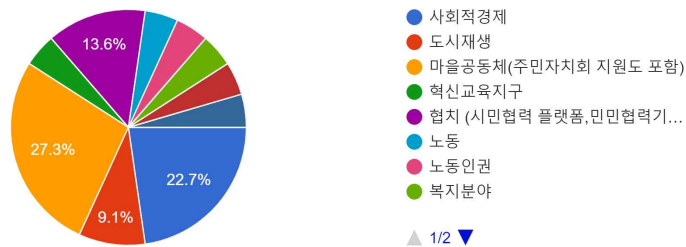
■ 재정규모



1년 예산은 1억 이하 6곳, 1억~5억 10곳, 5억 이상이 6곳으로 나타났다. 상근자 규모에 맞게 예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연간 1억~5억 사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 제일 많다.

■ 해당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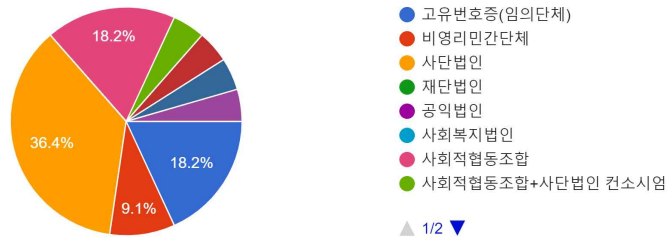
해당 분야
응답 22개



마을공동체 분야 6개, 사회적경제 분야 5개, 그 다음이 협치와 도시재생 분야이다. 정책의 제안 순서와 속도에 맞게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다.

■ 수탁법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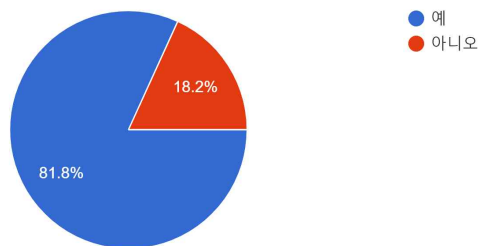
수탁법인 법적형태 (범위에 없을시 기타에 추가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응답 22개



사단법인이 제일 많고,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 단체도 꽤 많이 수탁을 받고 있다.

■ 권역 내 단체들 간 비정기적(정책제안, 구정 대응, 축제, 포럼 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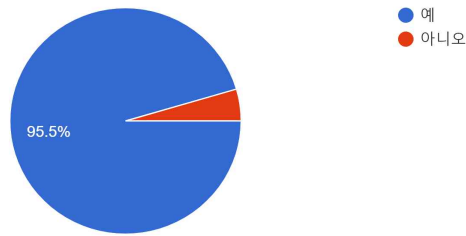
권역내 단체들간 비정기적(정책제안,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응답 22개



■ 자치구 내 단체들 간 비정기적(정책제안, 구정 대응, 축제, 포럼 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자치구내 단체들간 비정기적(구정 대응, 축제, 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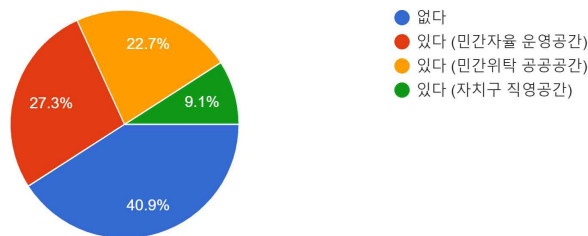
응답 22개



■ 자치구 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자치구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응답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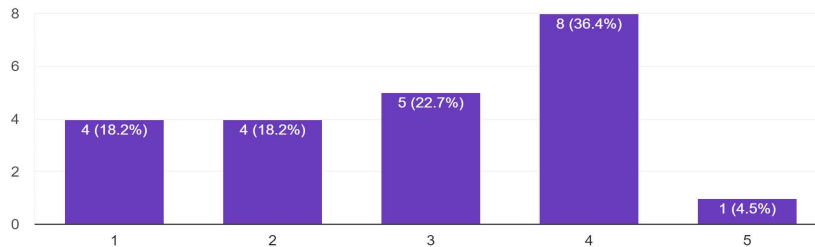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도 공유공간에 대해 없거나 대부분 민간이 운영한다고 답했다.

■ 자치구 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구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응답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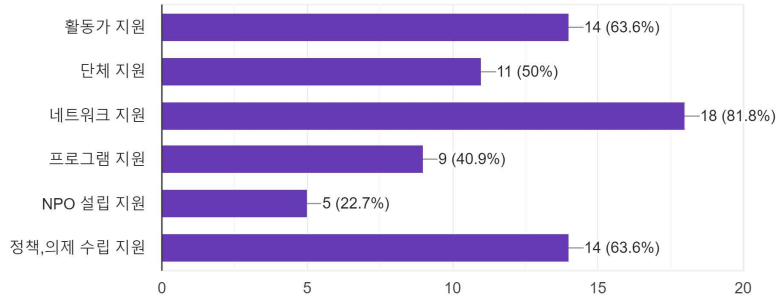


다른 단위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은 조직의 특성상 지원 예산이나 정책에 밝은 것으로 보인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응답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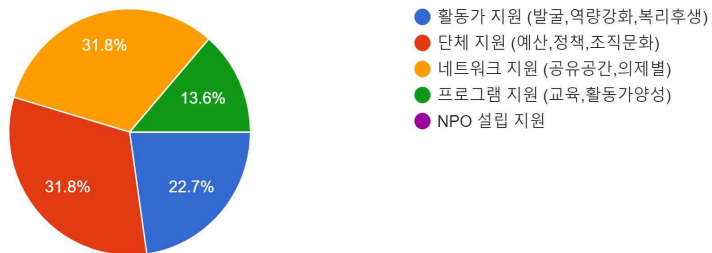


가장 필요한 지원은 단체와 네트워크 지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이 활동가 지원으로 나왔다. 중간지원조직은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에는 노하우가 있지만, 각 단체와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지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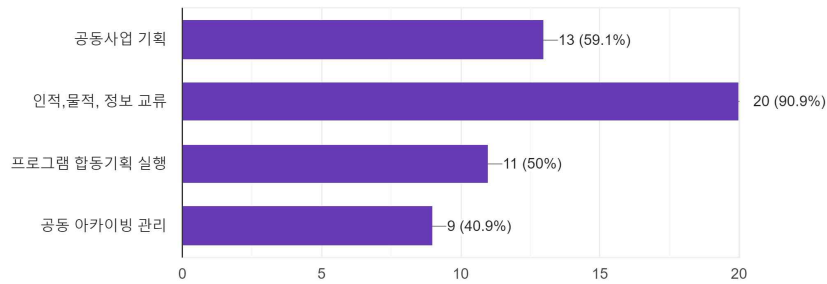
응답 22개



네트워크와 활동가 지원이 높게 나왔고, 특이하게도 정책, 의제 수립 지원이 높게 나왔다. 중간지원조직이 정책의 주요한 실행주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른 현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가 아닌가 한다.

■ 서남권 내 NPO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선택 가능)
응답 22개



다른 단위와 거의 비슷하게 인적, 물적, 정보교류를 중요하게 보았고, 공동사업 기획이 높게 나왔다. 집행력이 다른 단위보다 나아서 사업참여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4. 서남권 협치 현황 및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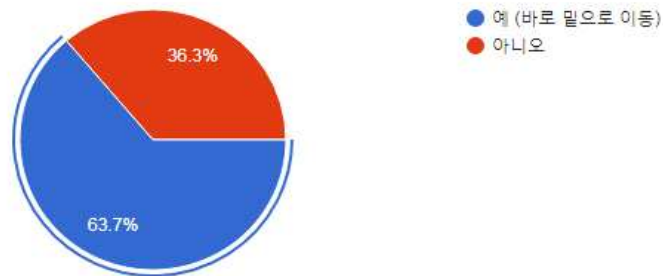
단체, 네트워크, 중간지역조직의 민관파트너십 현황조사

1. 단체

■ 귀 단체는 협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귀 단체 or 네트워크 or 중간지원조직은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응답 160개



■ 참여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나요?

번호	분야	답수	%
1	지역사회혁신계획(진단과권고 분야, 협치기반조성, 안전환경분과)	23	19.7
2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마을부역, 마을공간)	18	15.4
3	교육	14	12.0
4	민민협력사업	12	10.3
5	참여예산	7	6.0
6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위	6	5.1
7	도시재생	5	4.3
8	여성	4	3.4
9	자활, 일자리창출, 노동 관련 분야	4	3.4
10	문화	4	3.4
11	네트워크	3	2.6
12	아동청소년	3	2.6

13	청년(청년정책, 청년네트워크)	3	2.6
14	돌봄	3	2.6
15	환경안전	2	1.7
16	장애인	2	1.7
17	정책 연구 및 제안	1	0.9
18	건강생태계	1	0.9
19	원탁회의	1	0.9
20	잘 모르겠다.	1	0.9
계		1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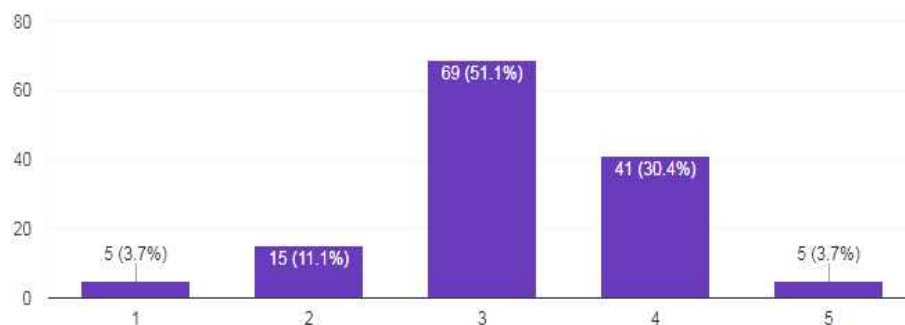
설문참여 160개 단체 중 63.4%인 102개 단체가 협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분야에 대한 응답은 19가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협치사업인 지역사회혁신계획, 마을자치, 공동체, 민민협력분야가 45.4%로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영역도 10.3%를 보였다. 자치구 혁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총 55.7%를 차지하고 있다.

■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응답 135개



협치를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라는 질문에 4,5번 아주 좋았더라는 방향으로 응답한 비율은 33.8%(45개 단체)였고, 3번(보통, 중간)에 해당하는 비율이 51.5%(70개 단체)로 가장 높았다.

아주 나빠졌다라는 방향의 1,2번 응답도 14.7%로 20개 단체가 응답했다. 3,2,1번의 응답을 합하면 66.2%로 민관 파트너십의 개선에 대해 그리 기대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경험으로 ‘사업이나 예산, 정책이 온다고 해도 오래된 관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그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호	내용	답수	%
1	소통/이해/협력/관심/신뢰 민민 간, 민관 간 이해도 향상 (소통, 조직 간 활발한 소통, 협력, 공유, 논의를 통한 공동운용)	47	47
2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음 (공정한 의사소통채널의 확보가 쉽지 않음, 행정의 변화가 없음 협치마인드 부족, 아직까지 들러리(?), 구조화된 행정에 매몰, 관의 형식적 협치와 민의 순응)	31	31
3	시대의 반영, 민관의 필요성과 이를 실행해야 하는 의무성 (행정의 의지와 민간의 자율성 간의 긴장관계, 서로의 필요와 인식, 자본의 공유, 협치의 대세적 흐름, 민간자원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10	10
4	(주체) 활동가들의 활동력 강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마을의 변화, 공공과의 연계활성화 및 자 원의 다양성, 주민참여활성화, 장애인인식개선, 마을활동이 활발함, 민의 성장, 협치사업을 통한 민의 참여와 역할 변화, 주민들의 등장)	9	9
5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인식변화	2	2
6	(사례) 생활환경개선이 어렵던 도로변 일명 빨간집을 개선하고 있다	1	1
	계	100	100

변화의 이유는 소통, 협력, 상호이해 등 민관의 노력에 대한 기대가 47%를 차지했으며, 변화를 체감할 수 없음도 31%가 나왔다. 여기에 시대적 흐름 또는 사업수행의 의무성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협치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응답도 10%를 차지한다.

표의 2,3번 응답(41%) 내용은 표현은 다르나, 형식적 협치에 대한 한계성을

미리 지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직 9% 정도의 수치를 보이지만, 변화의 이유에서 주체성을 강조한 응답도 있었다. 활동가들의 활동력 강화와 마을공동체의 성장이 변화의 요인이라는 응답은 %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며, 주민의 성장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본질적 물음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호	내용	답수	%
1	잘 모름, 정보 부족	15	34.9
2	인적, 시간적 여력이 안 됨	13	30.2
3	협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형식적 진행, 행정중심, 절차의 경직성, 협치관점의 부재 등)	7	16.3
4	회원참여역량 부족, 활동의 한정성	2	4.7
5	정보공유의 비적절성으로 이권다툼으로 변질된 경험	1	2.3
6	내 관심 분야와 다름	1	2.3
7	기타답변	4	9.3
	계	43	100

협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보 부족이 34.9%를 차지하고 있고, 인적, 시간적 여력이 없음이 30.2%로 나왔다.

이번 설문은 7개 자치구 160개 단체가 참여한 설문으로 자치구별 정보유통 과정과 단체 간의 활동여력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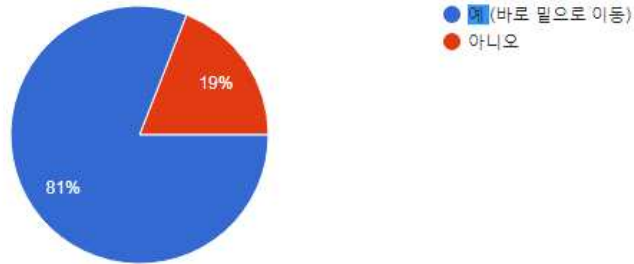
협치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 16.3%, 역량부족이 4.7%로 응답되었다.

2. 네트워크 조직

■ 귀 네트워크는 협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귀 단체 or 네트워크 or 중간지원조직은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응답 21개



네트워크는 응답 조직 중 17개(81%) 조직이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4개(19%) 조직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있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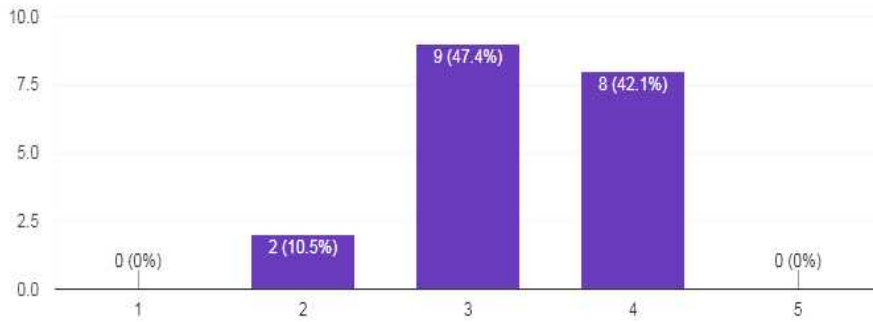
번호	내용	답수	%
1	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및 각 분과	7	41.2
2	민민협력	3	17.6
3	(마을)공모사업 등	2	11.8
4	혁신사업	1	5.9
4	문화예술	1	5.9
4	환경	1	5.9
4	주민자치	1	5.9
4	복지	1	5.9
	계	17	100.1

지역사회혁신계획 분야에서 41.2%, 민민협력사업도 17.6%가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간지원조직의 응답에 민민협력사업 참여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차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모사업참여도 협치의 일환으로, 협치사업에 대한 해석이 다른 파트에 비해 확장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응답 19개



네트워크는 민관파트너십의 변화척도에 2번(나빠지고 있다) 10%, 3번(보통, 중간) 47.4%, 4번(좋아지고 있다)에 42.1%로 응답했다.

보통과 나빠지고 있다는 합하면 57.4%이다. 네트워크가 나빠지고 있다는 경향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다.

■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호	내용	답수	%
1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서로 소통 원활, 문제의식 공유 등)	7	38.9
2	참여 활성화 (협치의 필요성과 연대의식, 민관이 노력, 민의 의견수렴, 실행 가능 추진력 확보)	5	27.8
3	판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음 (변화체감 없음,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실행단계에서 소외)	4	22.2
4	행정의 관료적 태도 (담당직원만 움직일뿐, 구청장 및 간부들 수동적, 관주도로 협치 퇴색)	2	11.1
계		18	100

■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호	내용	답수	%
1	관주도의 협치 시민사회 도움 안 됨	3	60
2	민간 주체마다 생각이 다르다.	1	20
2	모름	1	20
계		5	100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1번) 행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과 (2번) 참여 활성화가 66.7%를 차지했다. 반면, 33.3%가 (3번) 판단하기에 이롭고 (4번) 행정의 관료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변화 척도와 참여하지 않는 원인의 분석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척도 3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척도 3번에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부정적인 이유와 민관의 노력에 의해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네트워크 조직은 노력의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선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행정, 관료사회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도 관주도의 협치가 시민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단체,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의 민관파트너십 현황 조사 설문결과 총평

단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현재 펼쳐지고 있는 협치사업을 통한 민관파트너십의 변화 체감도를 설문했다. ¹⁵⁾

단체는 총 160개, 네트워크는 21개, 중가지원조직은 22개가 참여했다.

협치사업의 참여는

-설문파트 3곳이 평균 72.8%(135개 단체 및 조직)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15) 주요한 내용이 주관식으로 질문되어, 분석자가 문구를 해석하고, 비슷한 내용을 한 카테고리 묶어서 해석했다. 주관식 내용은 설문자의 의도와 분석자의 해석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린다.

- 협치 사업의 **변화체감도 또는 기대감**은(단체 47%, 중간50%, 네트워크 38.9%) 중간지원조직이 다른 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한 긍정성도 (단체 57%, 중간71.4%, 네트워크 60.7%) 중간지원조직의 변화의 원인에 대한 긍정성도 높게 나타났다.
- 협치사업에 대한 **우려감**은(단체 31%, 중간21.4%, 네트워크 33.3%) 네트워크와 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주관식 질문에서도 협치와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은 형식적인 협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협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협치 과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 이후 등장한 혁신적 마을사업들이 협치의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기대를 놓치지 않으면서, 형식적 협치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견제의 감각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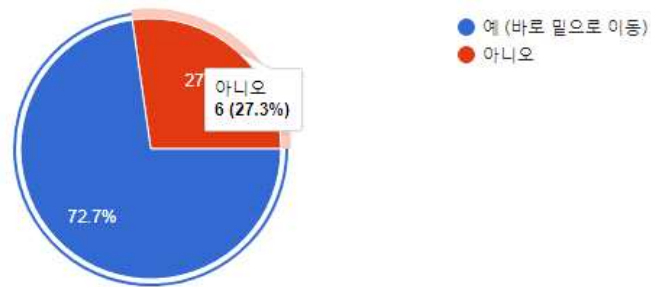
협치를 위해서 행정의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주지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과 변화사례들을 만들려는 노력과 더불어 주체의 성장을 위한 관점도 놓치지 않고 있다.

3. 중간지원조직

■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귀 단체 or 네트워크 or 중간지원조직은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응답 22개



중간지원조직은 19개 조직(72.7%)이 협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있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나요?

번호	내용	답수	%
1	다양한 분과활동 (행정경제분과, 공익활동촉진분과, 도시재생, 환경, 복지, 청년, 커뮤 니티케어 및 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14	73.7
2	노동·인권(2명)	2	10.5
3	참여예산	2	10.5
4	혁신교육	1	5.3
	계	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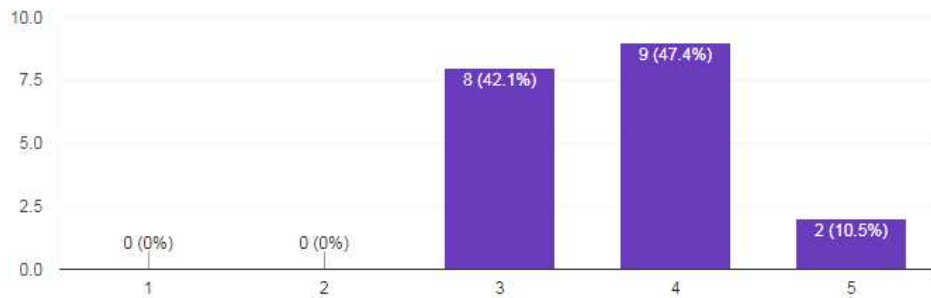
어떤 분야에 참여하는가라는 질문에 73.7%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노동, 인권, 참여예산, 혁신교육 참여가 나왔다.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상 주로 업무와 연계되는 분야에서 참여 할 것으로 예측되며, 민민협치라는 명칭으로도 해석되는 민민협력파트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응답 19개



중간지원조직은 민관파트너십의 변화에 대해 3번(보통,중간) 42.1%, 4,5번의 좋아졌다라는 경향에 57.9%로 응답했다.

3번(보통, 중간)을 변화 없음, 더 나빠지지는 않았음으로 해석 한다면, 체감에 대한 기대치는 57.9%,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 즉, 변화 없다는 진단이 42.1%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그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호	내용	답수	%
1	소통과 공유를 통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민관 상호노력으로 협치체계 갖추어가고 있음 상호이해에 기반 한 소통과 공동사업 등	7	50.0
2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변화 :정책공감대확산, 협치공론장, 공동의제발굴	3	21.4
3	아직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함	3	21.4
4	주체의 활성화 요인 : 민간영역의 활동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7.1
계		14	99.9

변화의 근거 응답에는 50%가 (1번) 소통과 공유를 통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2번) 협치사업의 활성화와 (4번) 주체의 활성화 요인을 더하면 78.5%가 위 질문의 좋아지고 있다라는 경향의 근거로 해석된다.

이는 각 자치구의 서로 다른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민관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호	내용	답수	%
1	앞으로 참여할 예정	2	33.3
2	물리적 활동시간의 한계	1	16.6
2	협치에 대한 이해부족	1	16.6
2	관련정보 없음	1	16.6
2	업무 관련 분야 협치 미 시행	1	16.6
	계	6	99.7

5. 서남권 간담회 정리

일시 : 2019년 12월 2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영등포구 당산1동 주민센터 2층

참석 : 강서구 3인, 관악구 3인, 구로구 2인, 금천구 1인, 동작구 1인, 양천구 4인, 영등포구 2인, 서울시NPO지원센터 2인 총 18인(연구책임자 3인 포함)

연구 설계 당시 2차에 걸친 집담회를 기획하였지만 시간 부족으로 인해 1회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해석상의 오류를 확인, 보완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고, 지역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7개 자치구의 이해도에 차이가 있어 질문과 답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답변이 섞여서 진행되었다. 아쉬운 점, 좋았던 점, 지역외제, 권역NPO지원센터에 대한 의견 등 4개를 기준으로 집담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아쉬웠던 점

- 연구·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
- 연구 과정에 지역별 집담회가 있었다면 풍부할 수 있었을 것 같다.
- 지역 NPO의 역사와 현황을 지역연구자 혼자 작업하기는 힘들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 기존 네트워크가 없던 곳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참여하지 못한 단체가 있어 아쉬웠다.
- 조사 과정에서 지역의 단체들이 분산, 단절 되어있는 상황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재정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아쉬웠다.
- 조사사업의 목적 등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아쉬웠다.
- 설문이 단순한 정보중심이라 지역 단체들의 실제 고민을 담아내지 못해 아쉬웠다.

2) 좋았던 점

- 7개 자치구의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한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연구 과정에서 지역단체와 만나고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이 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 협치, 사회적경제, 마을 등 분야별로 고민되는 현안이 있고, 다양한 의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음이 아쉽다.
-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 후 무엇을 하해야 할 지 고민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것 같다.
- 지역시민사회를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 같다.

3) 지역의제

- 구로, 금천, 영등포는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한다. 중국어 이중언어 사용관련 서울시 교육청과 주민 간 이견이 있다.
- 관악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공동행동이 주관하여 3회에 걸친 자산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동작구도 자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함께 추진할 단체를 모으는 과정이다.
- 양천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와 자산화가 관심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 강서는 포괄적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다. 다양한 단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구조를 만들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도 서남권을 포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가능성으로 NPO지원센터 설립을 고민했다.
- 금천은 협치에서 민관의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다. 더불어 NPO의 정체성, 시민역량강화도 주요 관심일 것이다.

4) 서남권NPO지원센터 관련

- 7개구가 너무 넓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지역을 네트워크하는 역할이 분명할 것 같다.
- 협치와 관련하여 서남권NPO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민관 정책, NPO의 위치와 역할 정립, 공익활동지원조례 확산 등에 노력하면 좋겠다.
- NPO지원센터가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 7개구 공통의 사업은 힘들지만 공통주제를 통해 필요한 자치구 네트워크는 가능할 것 같다.
- 지역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 2012년 이 후 설립된 단체들의 NPO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권역NPO지원센터가 시민단체에게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NPO가 약한 지역도 센터를 통해 정책의제 수립지원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NPO가 활발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을 지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지역별 NPO 간담회 등을 통해 서남권NPO지원센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자체가 아니라 서남권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센터 설립의 목표일 것이다.



IV. 총평 및 시사점

서울시 민선7기 시정계획(2019년 ~ 2022년) 중 지역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계획(연간 1개 권역 NPO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2018년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 동남권 NPO지원센터가 설립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 2020년 이 후에도 서울시 전역에 권역 NPO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 후, 시민사회의 등장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온 결과 공동체모임과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NPO 조직이 등장하고 더 다양한 부문에 참여를 통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의제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도 증가하였으며, 네트워크의 형태 또한 단순 네트워크를 넘어 포괄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사회 전체의 성장에 대한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에서 권역 NPO지원센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 서남권 7개 자치구 조사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우선 이번 '서남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서남권 7개 자치구, 타 권역 보다 2배 정도의 자치구 숫자(7개), 지역 면적(서울시 전체면적의 26.9%), 인구수(서울시 전체인구의 30.4%) 등 여러 부분에서 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7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연대사업을 진행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등포구에서 관악구와 동작구가 분구되고,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되고,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분구되기 이전 또는 직후 까지 2개~3개의 자치구가 함께 활동한 경험은 풍부한 역사로 남아있지만, 7개 자치구가 함께 한 것은 첫 시도였다.

이번 조사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음이 아니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비슷한 상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나 특징과 무관하게 시민사회 역시 시대 흐름의 변화와 함께 성장 변화하는 것이기에 현시대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생각된다.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다름은 오히려 서남권의 다양한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기회였다. 이번 조사는 과연 서남권 7개 자치구 NPO들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1. 서남권 지역 현황과 주요 의제

1) 서남권 지역 현황

서남권은 7개 자치구(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남1권(강서, 양천) 서남2권(영등포, 구로, 금천) 서남3권(동작, 관악)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6.9%를 차지하고, 서울시 인구 중 30.4%인 317만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산업배후 주거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24.4%)보다 높은(25.9%)지역이다. 외국인 밀집주거지도 다수 분포하고 있고, 영등포구(34만), 구로구(33만), 금천구(19만)의 외국인 거주율도 아주

높다.

구로구와 영등포구 같은 준공업지역 일대는 근대산업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관악구와 동작구에는 대학가, 학원가 고시촌 등 교육관련 기능이 밀집되어 있다.

2) 서남권 지역 주요 의제

서울시 지표 값 대비 대부분의 서남권 자치구는 문화시설,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우선공급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금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보건소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를 중심으로 우선공급이 필요한 상태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에서는 1인 가구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인당'과 같은 1인 가구 모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구가 많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현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설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역별 특성 보고서를 보면 서남권이 상대적으로 여성, 생태·환경의 분야에서 공통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서남권 시민사회 역사와 서남권 NPO 특징 및 현황

서남권 시민사회의 역사는 각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 구로, 금천, 영등포 등은 대규모산업단지라는 지역특성에 의해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생활형 주민운동, 의제운동으로 변화하여온 특징을 볼 수 있으며, 관악, 동작은 빈민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80년대 이전부터 생활형, 주민 참여형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관악의 경우 그 운동성이 강한 모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도시 개념이 강한 강서, 양천의 활동역사를 들여다보면 우장산살리기 운동, 고압선지중화사업, 백제박물관건립운동 등 환경, 문화유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지역차원에서 창립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각 지역의 시민사회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시대적 과제를 안고 활동하였으며,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출발하여 활동해 왔다. 우여

곡절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각 지역의 활동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왔으나, 변화하지 않고 굳건히 한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사람, 단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강서의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관악의 관악주민연대와 관악사회복지, 금천의 새터교회와 살구여성회, 영등포의 영등포산업선교회, 구로의 구로시민센터가 1980,9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레 소멸과 새로운 융합을 거듭하였고, 그 정신과 사람이 지역에 남아 시민사회를 더 탄탄히 만들어 가고 있다.

2000년~2019년 현재까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각 지역마다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를 전제로 한 정책(자활후견기관, 교육복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혁신교육지구 등)들이 마련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생성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주민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정책 환경에서 각 자치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자체나 광역시가 어떻게 시민사회를 지원하는가에 따라 시민사회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와도 닿아 있을 것이다.

2010년대 이후 각 지역의 시민사회는 비판적 운동과 더불어 의제별 네트워크의 활성화, 더 구체화된 문제해결형 운동, 다수의 생활형 의제들을 다루는 형태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와 대안을 통한 문제해결과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남권 시민사회의 상근자부족, 재정부족, 공간부족 등 열악한 상황이 공통의 과제로 여겨진다. 반면 협치영역의 확장과 다양한 의제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역할과 활동의 규모와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서남권NPO지원센터의 필요와 연결되어지면서, 네트워크 지원, 의제 지원, 단체 지원 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남권의 성장에너지가 현실화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서남권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건강한 NPO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로 보여진다.

서남권의 역사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특성은 서남권의 범위 인식과도 일치한다. 구로-금천-영등포를 중심으로 서쪽에 강서-양천, 동쪽으로 관악-동작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서남권에는 7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어 지나치게 넓은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범위는 활동경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므로, 공동 활동의 경험이 지리적 범위를 넘어 공통의 지역이라는 연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규정지어진 서남권은 추후 네트워크의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서남권역으로의 동질감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특히, 강서구와 양천구는 우장산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시민사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고압선지중화를 통해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졌고, 강서양천여성의전화 등 환경, 여성주의 활동이 활발한 특징이 있다. 관악은 빈민운동과 지역운동이 중심이지만 최근 관악젠더스쿨과 창립을 앞두고 있는 여성미래포럼(이는 조사과정에 기록되지는 않았다.),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이 있다. 또한 구로의 중심단체 구로여성회와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금천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인 살구여성회와 금천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남권 여성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남부여성발전센터, 동작의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여성주의 모임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의 활동가 양성을 위한 협동학교 등은 NPO 정체성 강화와 함께 추후 좀 더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서남권 시민사회 지원기관 및 자원 현황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자치센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시민협력플랫폼 등 기존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시간적 부족과 더불어 몇 개 지역에서는 조사 경험이 없어 지역자원을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민관협력 사업에 가장 중요한 주체로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자원을 어떻게 성장 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가장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필요한 것은 단체와 활동가 지원이라고 한 것도 이런 경험의 반영이라고 여겨진다.

네트워크 조직은 건강, 생태·환경, 교육, 문화, 주민자치, 의정평가, 아동·청소년,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참여하였다. 네트워크는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이지만, 인적,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한 단위이다. 따라서 센터의 역할로 단체 지원을 가장 필요하게 바라보지만, 네트워크의 경험에 대한 긍정성 때문인지 네트워크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 후 센터가 생겨난다면 가장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보여진다.

4. 서남권 NPO 지원센터 설립 욕구

초기 조사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서남권NPO 기초조사를 위한 7개구 네트워크’는 서남권의 범위가 타 권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고 자치구별 시민사회의 특징도 달라 ‘서남권NPO지원센터’에 대한 욕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설문을 통한 조사결과 단체의 89.3%, 네트워크 단위 100%, 중간지원조직 95.5%가 서남권NPO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가장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는 네트워크 지원(공유공간, 의제별), 단체 지원(예산, 정책, 조직문화), 활동가 지원(발굴, 역량강화, 복리후생)의 순서로, 네트워크는 단체 지원, 활동가 지원, 네트워크 지원의 순으로, 중간지원조직은 단체 지원, 네트워크 지원, 활동가 지원의 순으로 나타나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세 가지를 현재 주요하게 필요로 여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남권NPO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단체는 네트워크 지원, 활동가 지원이 가장 높고, 단체 지원과 정책의제 수립 지원 역시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활동가 지원, 네트워크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네트워크 지원이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활동가 지원과 정책의제 수립 지원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서남권 NPO들은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로 네트워크 지원(공유공간-공간자체보다는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 개념, 의제별)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활동가 지원과 정책의제 수립 지원 역시 중요한 역할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사업을 위해 서남권NPO지원센터와 자치구의 관계 설정에서 세 단위 모두 인적·물적·정보 교류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단체와 중간지원조직

의 공동사업 기획을 꾀한 반면 네트워크 그룹은 공동 아카이빙 관리를 꾀했다. (네트워크의 특성상 책임있게 자료를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자치구의 문제가 단순히 자치구 한 곳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의제별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와 공동사업 기획은 서남권NPO지원센터에 대한 기대 역할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5. 시사점과 한계

서남권 7개구 네트워크, 설문조사, 집담회 등을 통해 보여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 ①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 과정은 이미 센터의 역할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7개 자치구에서부터 서남권NPO지원센터에 대한 공론화를 활성화 하고, 센터에 대한 스스로의 필요성과 함께 어떤 센터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답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런 논의의 과정은 서남권 NPO의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남권 시민사회와 NPO지원센터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② 서남권NPO지원센터는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서남권 NPO를 지원하고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제 수립 지원 등에서 지역별 공통 관심을 네트워킹 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협치 관점에서 민관 정책, 시민사회 위치와 역할, 공익활동지원조례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여러 노력과 과정이 NPO의 정체성을 높이고, 활동가의 역량을 높여 시민사회의 성장을 만드는 센터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③ 2010년 이후 설립된 단체들이 74%인 것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체들은 대개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하는 임의단체이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작은 보조금으로 위태롭게 조직을 유지하는 이 단위들이 튼튼한 NPO로 성장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중요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임의단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지원방안이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④ 7개 자치구를 포괄하기 위해 2~3개의 소권역을 나누어 집중적으로 지원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가를 두고, 이를 다시 서남권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간영역에

있어서 작은 서남권NPO지원센터 사무실을 두고, 지역을 찾아가고 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센터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 ⑤ 서남권 시민사회의 특징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남권은 생태·환경과 젠더라는 의제로 공동사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과정에서 중앙단위 생태환경NPO나 젠더전문NPO와의 연대의 경험을 늘인다면 지자체의 정책의제 수립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구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서남권의 여러 단위가 요구한 NPO 활동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실험 할 수 있는 방안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연구는 많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처음으로 7개구가 함께 진행하였기에 소통체계의 부족, 단체들이 가장 바쁘기도 한 연말에 실시하여 발생한 물리적 어려움, 짧은 조사기간으로 인한 어려움, 조사설계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남권 자체의 기초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단체 현황 조사에 치우쳐 있어 실제 지역 시민사회가 느끼는 어려운 점이나 당면 현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과정을 넣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지역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과정 자체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지금까지 어려웠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만든 자치구도 있었기에 아쉬움과 함께 성과로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후 서남권 각 자치구별 결과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공론의 자료로 만들고, 7개 자치구의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공동의 제 사업 등을 실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명확한 역할과 위상을 가진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첨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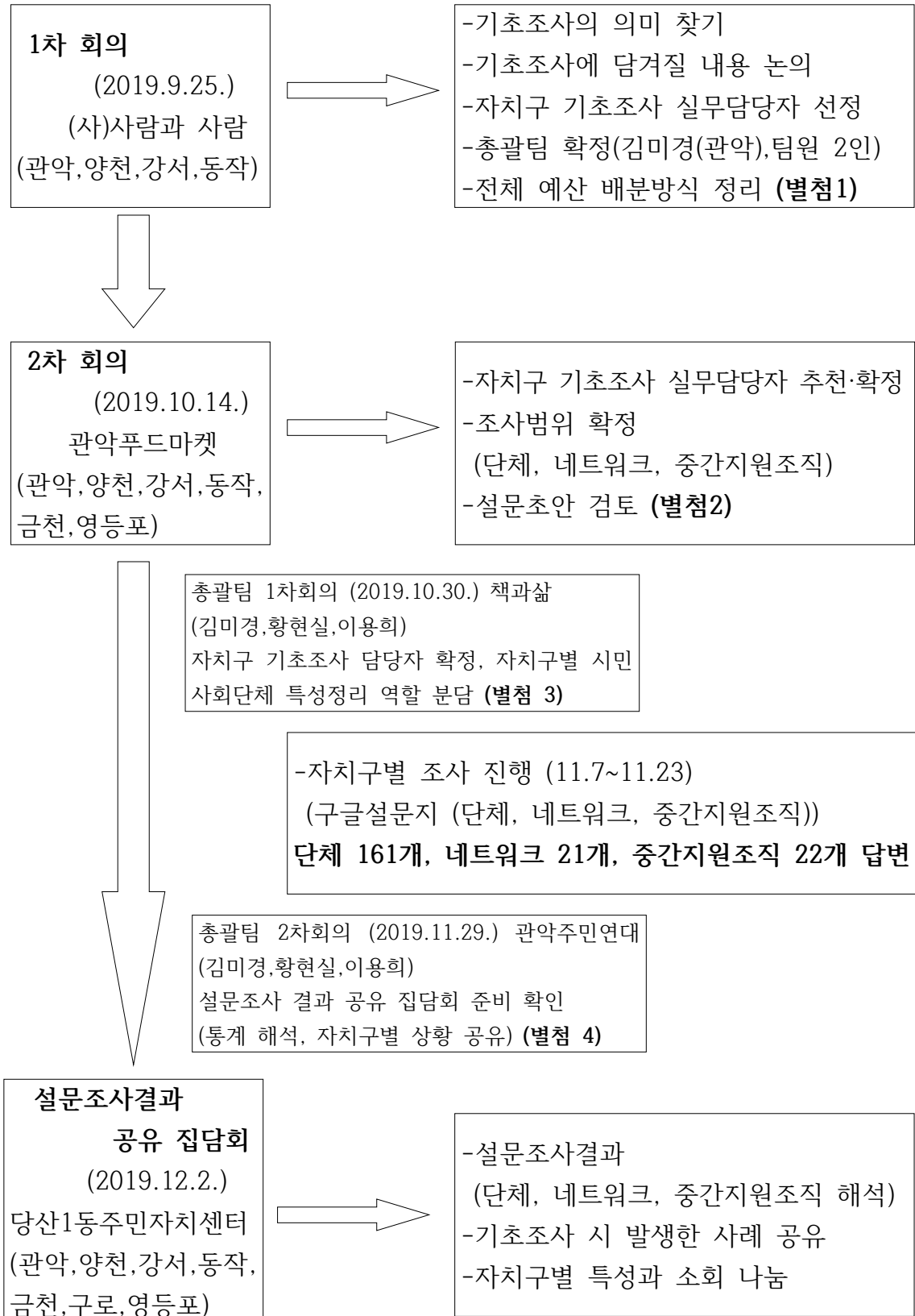
자료 1.: 서남권NPO지원센터 기초조사 진행 정리

자료 2.: 연구조사 경과 및 회의기록

- (1) 서남권NPO지원센터 기초조사 1차 회의
- (2) 서남권NPO지원센터 기초조사 2차 회의
- (2) 총괄팀 회의1
- (4) 총괄팀 회의2

자료 3.: 조사 설문 내용(단체용, 네트워크용, 중간지원조직용)

<첨부> 1. 서남권NPO지원센터 기초조사 진행 정리



<첨부> 2. - (1) 서남권NPO지원센터 기초조사 1차 회의

-일시: 2019. 9. 25. (수)

-장소: 사) 사람과사람

-참석: 관악 김미경(관악주민연대), 구명숙(관악공동행동 시민기반위원회),
양천 정미영(양천시민협력플랫폼),

강서 윤성미, 이미선(강서구시민협력플랫폼)

동작 조양민(꿈꾸는도토리)

* 미참석: 영등포, 구로(금천은 주체 미지정)

1. 지난 회의록 공유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록)

2. 기초조사 제안에 관한 의견나눔

1) 기초조사 참여 여부 포함 자치구 사전공유내용 확인

-동작: 권역NPO지원센터의 입지를 찾기에는 서남권 자체로 광역의 개념이라서 권역조정 여부부터 재논의되길 바라고 있다. 운동반경이 넓은 센터가 유의미할까, 인접거리에 만들어지는 NPO지원센터의 경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기초조사 진행에 주체로 참여하는 부분에 부담이 적지 않았다.

-양천: 지난 회의 때도 제안된 것처럼 양천은 권역이 광역 개념이라 권역NPO지원센터의 권역범위에 대한 제고의견을 요청하고 싶다. 기초조사 참여 여부에 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관악: 회의참가 주체가 바뀐 관계로 지난 회의 논의사항을 사전 브리핑 받고 참여했다. 기초조사가 진행된다고 공유 받았고, 기초조사를 관악에 어떤 의미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왔다.

2) 기초조사의 의미찾기

-권역센터 추진은 미정이지만 자치구별로 시민사회 기초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므로 이후 설계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제안이다.

-공통조사 항목/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어떤 사업의 정당성을 위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자치구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효능감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각 자치구의 시민사회 기반환경을 조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초조사에 참여하여 객관적, 확장적 자료를 내면 그것이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조사결과를 통해 권역NPO지원센터가 아니라, 서울NPO지원센터가 직접 서남권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로 더 적합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각 자치구에 널려있는 자치구 시민사회 자료를 쾀다고 생각하고 너무 무거운 부담을 가지지 말고 참여하자.

3) 기초조사 결과로 담겨질 내용

-어디까지가 권역으로 가능할까? 심리적,거리적, NPO 환경적 측면 등

-권역센터 거점의 위치여부를 떠나, 권역센터의 역할로 전파성을 가지는 코어가 어디가 될 수 있을지...기능적 측면에 관한 객관적 자료 마련의 측면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어떻게 담아낼까? 지역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측면

3. 자치구 기초조사 실무담당자 마련에 관해서

① 7개 자치구 “모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담당자끼리 “기초조사운영단”을 만든다.

② 총괄팀 구성:

역할 : 각 자치구별 자료를 통합정리,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구성 : 총괄팀장 - 김미경

팀원 - 2인(관악, 동작, 영등포에서 1인, 구로, 금천, 강서, 양천에서 1인 마련기로 함)

4. 예산

① 총 1,000만원 = 700만원(각 자치구)+300만원(총괄팀)

700만원= 자치구당 100만원 (자치구기초조사 90만원+ 공동경비 10만원)*7개

* 공동경비 총 70만원 쓰임: 기초조사운영단 회의간식비 등

300만원=총괄팀 운영예산(사용예: 보고서작성연구자 인건비 200만원, 정리팀 2인 각 50만원)

* 총괄팀 예산은 총괄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로 함.

5. 차기 회의

① 10.4 까지 각 자치구 담당자를 정하고 단톡방에 공유한다.

이후 담당자들과 기초조사운영단을 구성, 기초조사 초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② 차기 서남NPO네트워크 회의 : 관악에서 갖는다. 일정과 장소는 추후 정한다.



<첨부> 2. - (2) 서남권 NPO 센터 기초조사 2차 회의

- 일시 : 2019. 10. 14. (목)
- 장소: 관악푸드마켓
- 참석: 동작 김도은
강서 이미선,윤성미,
관악 김미경
금천 김선정 마을인교육
양천 정미영

1. 논의 사항

지역 조사·연구자 확인 (강서 정준식 청년활동가, 구로,금천,강서,양천은 1인 미정) -양천,금천 연구자 추천필요-과업범위를 나눌 때 단체가 아닌 커뮤니티는 어떻게 조사해야할까? 관악은 커뮤니티까지 한다면 너무 많고, 동작은 마을공동체에서 수렴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찾아내기 힘들다. 양천은 포괄하고 싶은 커뮤니티를 넣고 싶다. (전수조사는 힘들지만 선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강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조사를 정리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 커뮤니티는 자치구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하면 될까 한다.
- 영등포는 지역을 지향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조사하고자 한다.
- NGO 활동을 지향하는 커뮤니티, 임의단체를 넣기로 한다.

2. 설문초안 검토(자료 첨부)

- 단체조사 내용 : 법인형태 → 단체형태, 사회복지법인 지우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지우고, 기타에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 관악 시민사회의 형성은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타구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 집담회는 조사사업을 진행한 분들 자치구별로 3~4명 정도가 한번에 만나는 것을 예상 중
- 집담회는 2권역으로 정도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 중간지원조직(단체조사표에 맞추어 정리하면 될 듯. 기본으로 해서 관련 양식 만들기)

- 시민사회 자원(공유공간, 중간지원조직 공간)은 공간위주로 정리하기로 한다. 어떤 지원을 하는지도 알아보고
- 단체사무실 주소도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쓸 수 있는 자리도 만들자. 주 거점 활용공간도 기입하기로 한다.
- 시민사회 자원(공유공간, 자원)은 공간위주로 정리하기로 한다.
- 먼저 자치구를 쓰게 하고 이후에 자치구별 서남권의 친밀도 정리해 본다.
- NPO지원센터의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서울 NPO지원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지도 물어보기. 조사목적, 이해도도 알려주고 물어보기. 기본사업의 취지를 먼저 앞에 넣었으면 한다.
- 협력 및 연대사업에 경험이 있나요? 로 바꾸기
- 협력 및 연대사업 의제, 이슈가 어떤 건지? 어떤 때 일상적 교류, 특정 현안이 터졌을 때, 정기적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큰 사업을 제안 받았을 때(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

3. 기타 안건

- 총괄사업비는 후불로 하여 따로 예산증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참여구는 10만원씩 먼저 총괄팀(이용희계좌로)에 내는 것으로
- 구글계좌를 따로 만들고 총괄팀만 수정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네트워크팀은 보기권한을 가진다.

4. 차기 회의

<첨부> 2-(3) 총괄팀 회의 1.

-일시: 2019. 10. 30. (수) 오전11시30분

-장소: 책과삶(영등포구)

-참석: 황현실, 김미경, 이용희

지역 조사원 확정

이복자(양천), 이광흠(구로), 정준식(강서)

김도은(동작), 이용희(영등포), 최성희(금천), 홍선(관악)

총괄팀(김미경, 이용희, 황현실)

1. 지역 권역별 자원조사

(서남권 전체현황: 황현실 담당, 김미경(관악, 동작), 이용희(영등포, 양천, 강서), 황현실(구로, 금천) 정리. 11월5일 18시까지)

최종정리는 김미경 담당

자료: http://urban.seoul.go.kr/4DUPIS/sub3/sub3_10_1.jsp

동남권 연구자료 예시에 맞추어 11월6일 설문정리, 권역별 정리본을 가지고 NPO지원센터 미팅

2. 지역조사 설문마감 : 11월 23일 까지

3. 1차 집담회 일정

설문에서 나오지 못한 상황을 공유하고 협치관련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참석: 지역조사원, 지역담당자 외 지역시민단체 활동가 (3명)

일시: 11월29일(오전), 12월2일(2시) 중 투표

장소: 영등포

4. 지역조사원 역할 및 활동내용

- 2019년 3월기준 비영리민간단체 리스트 참조 가능(드라이브 저장)
(지역조사원 공유하기)

자치구별 최소 30개 단체 정도는 받기로(사회적협동조합, 복지관운영자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곳도 가능, 웬만하면 실제 운영 중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지향이 있는 곳으로)

- 7개 조사원 설문진행 관련 소통은 이용희(이번 주 내로 하기)
- 다음 주부터는 자치구별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특징을 정리해서 볼 수 있어야함(협치(시민협력플랫폼, 민민협력),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선행연구를 확인해서 찾아볼 수 있음) ---> 점검자(황현실, 김미경, 이용희)
- 조사원이 진행하기 힘들 시 지역에서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 지역시민사회단체 양상 부분은 좀 더 확인(구별 지역사회혁신계획)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카톡방에 올리기(이용희)

5. 예산

지역 담당자들 합의한 9만원씩 총괄팀에 모으기로(계좌번호 만들기 이용희)
지역 담당자(김미경, 최성희, 김도은, 정미영, 윤성미, 이용희, 황현실)

(6) 다음일정

11월 6일 설문정리, 권역별 정리본 가지고 NPO지원센터 미팅



<첨부> 2. - (4) 총괄팀 회의 2.

- 일시: 2019. 11. 29. (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관악주민연대
- 참석: 황현실, 이용희, 김미경
 - 자료집 중간본 올리기(전체자료 정리) 프린트는 황현실(25부씩)
 - 기초자료 정리 담당 : 단체(김미경),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이용희)
 - 전체 질문 만들어 보기(주말 사이)
 - 자료집 링크 만들어 미리 공유하기(서남권 NPO 카톡방)
 - 녹음기(보이스 레코딩) 준비하기(이용희)
 - 간식, 장소 세팅담당 : 이용희
 - 준비팀 미리 만나기 : 1시에 만나기(황현실, 김미경)

행사순서

전체진행: 이용희,

질문진행: 황현실, 대답 : 이용희, 황현실

진행시간: 목표 2시간

0. 조사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소회를 먼저 들어본다.
1. 전체 발제를 빠르게 진행하고
(단체→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순서로)
2. 미리 정리된 질문을 나누고 토의를 제안한다.
3. 이후 더 질문 받고 대답하는 것으로



서남권 NPO 지원센터 기초현황조사

본 조사는 서울시의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에 권역 NPO 지원센터의 필요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NPO란 비영리기구의 총칭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NPO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NPO 지원센터,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운영중이고, 자치구별로 운영 및 설립계획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각 NPO의 협업, 공유, 지속가능성, 네트워킹, 사회적 영향력이 발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1. 조사 참가자 이름 *

2. 조사 참가자 전화번호 (설문에 오류발생시에만 연락예정입니다) *

3. 해당 자치구가 어디신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강서구
- 동작구
- 관악구
- 영등포구
- 금천구
- 구로구
- 양천구

활동 단체 현황

4. 단체명 *

5. 단체 사무실 주소 or 주로 활동하는 주소 (같은시는 하나만 기입) *

6. 사무실 소유형태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자가보유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_____

7.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자치구, 광역, 전국범위)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없다	1~2	3~5
자치구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광역(서울시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전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세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민간위탁 혹은 공모(보조금)사업을 진행중인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 아니오

9. 주요 수입원은 어디이고 비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0~20%	20~40%	40~60%	60~80%	80~100%
회원수입(자발적, 정기적 회원후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후원(비정기적 후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보조금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그 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단체 대표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

11. 단체 홈페이지 (온라인 소통채널) *

12. 단체 설립일 *

예: 2012년 12월 15일

13. 대표자이름 *

14. 상근자수 *

15. 회원수 *

16. 재정규모(1년 운영 자금) *

17. 활동범위 (중복선택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행정동
- 자치구
- 권역
- 서울시
- 전국
- 세계

18. 법적형태 (범위에 없을시 기타에 추가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고유번호증(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_____

19. 활동분야(중복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생태,환경
- 인권
- 평화,통일
- 정치
- 경제
- 교육,문화,체육
- 복지
- 소비자권리
- 노동,농민,빈민
- 건강,보건,의료
- 도시,교통
- 정보,통신,미디어
- 주민자치,풀뿌리,마을공동체
- 종교
- 주택,주거,도시재생
- 아동,청소년
- 청년
- 여성
- 다문화,이주민
- 장애인
- 모금.배분
- 국제개발협력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 사회혁신
- 자원봉사
- 기타: _____

20. 설립목적 *

21. 주요활동 *

자치구별 현황조사

22. 권역내 단체들간 비정기적(정책제안,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23. 자치구내 단체들간 비정기적(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24. 자치구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없다
 있다 (민간자율 운영공간)
 있다 (민간위탁 공공공간)
 있다 (자치구 직영공간)

25. 자치구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모른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잘 알고 있다

26. 본인 생각에 서남권이라고 하면 어느 자치구를 포함하나요? (중복 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27.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네
 아니오

28.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29.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단체 지원 (예산, 정책, 조직문화)
- 네트워크 지원 (공유공간, 의제별)
- NPO 설립 지원
- 프로그램 지원 (교육, 활동가양성)
- 활동가 지원 (발굴, 역량강화, 복리후생)

30.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활동가 지원
- 단체 지원
- 네트워크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NPO 설립 지원
- 정책, 의제 수립 지원

31.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공동사업 기획
- 인적, 물적, 정보 교류
- 프로그램 합동기획 실행
- 공동 아카이빙 관리

자치구별 민관파트너십 현황

최근 3년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포함한 민관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2. 귀 단체 or 네트워크 or 중간지원조직은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바로 밑으로 이동)
- 아니오

33. 있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나요?

34.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아주 나빠졌다 아주 좋아졌다

35. 그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36.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공

 Google Forms

서남권 NPO 지원센터 기초현황조사

본 조사는 서울시의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에 권역 NPO 지원센터의 필요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NPO란 비영리기구의 총칭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NPO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NPO 지원센터,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운영중이고, 자치구별로 운영 및 설립계획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각 NPO의 협업, 공유, 지속가능성, 네트워킹, 사회적 영향력이 발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1. 조사 참가자 이름 *

2. 조사 참가자 전화번호 (설문에 오류발생시에만 연락예정입니다) *

3. 해당 자치구가 어디신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구로구
- 금천구
- 동작구
- 양천구
- 강서구
- 관악구
- 영등포구

활동 네트워크 현황

4. 네트워크 이름 *

5. 주로 모이는 장소 *

6. 민간위탁 혹은 공모(보조금)사업을 진행중인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7. 네트워크 주 진행자 이름 *

8. 네트워크 주 진행자 전화번호 *

9. 네트워크 대표 전화번호/이메일 *

10. 네트워크 설립일 *

예: 2012년 12월 15일

11. 네트워크 대표단체 (없으면 없다고 표시) *

12. 정기모임 일정 및 횟수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주 1회
 격주 1회
 분기 1회
 기타: _____

13. 네트워크 참여단체수 *

14. 재정규모(1년 운영 자금) *

15. 활동범위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행정동
 자치구
 권역
 서울시
 전국
 세계

16. 법적형태 (범위에 없을시 기타에 추가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고유번호증(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_____

17. 활동분야(중복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생태,환경
- 인권
- 평화,통일
- 정치
- 경제
- 교육,문화,체육
- 복지
- 소비자권리
- 노동,농민,빈민
- 건강,보건,의료
- 도시,교통
- 정보,통신,미디어
- 주민자치,풀뿌리,마을공동체
- 종교
- 주택,주거,도시재생
- 아동,청소년
- 청년
- 여성
- 다문화,이주민
- 장애인
- 모금.배분
- 국제개발협력
- 사회적경제(협동조합)
- 사회혁신
- 자원봉사
- 기타: _____

18. 설립목적 *

19. 주요활동 *

20. 참여단체명 *

자치구별 현황조사

21. 권역내 단체들간 비정기적(정책제안,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22. 자치구내 단체들간 비정기적(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아니오

23. 자치구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없다
 있다 (민간자율 운영공간)
 있다 (민간위탁 공공공간)
 있다 (자치구 직영공간)

24. 자치구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모른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잘 알고 있다

25. 본인 생각에 서남권이라고 하면 어느 자치구를 포함하나요? (중복 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강서구
- 관악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양천구
- 구로구
- 동작구

26.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네
- 아니오

27.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28.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단체 지원 (예산, 정책, 조직문화)
- 네트워크 지원 (공유공간, 의제별)
- NPO 설립 지원
- 프로그램 지원 (교육, 활동가양성)
- 활동가 지원 (발굴, 역량강화, 복리후생)

29.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활동가 지원
- 단체 지원
- 네트워크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NPO 설립 지원
- 정책,의제 수립 지원

30.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공동사업 기획
- 인적,물적, 정보 교류
- 프로그램 합동기획 실행
- 공동 아카이빙 관리

자치구별 민관파트너십 현황

최근 3년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포함한 민관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1. 귀 단체 or 네트워크 or 중간지원조직은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바로 밑으로 이동)
- 아니오

32. 있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나요?

33.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아주 나빠졌다 아주 좋아졌다

34. 그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35.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남권 NPO 지원센터 기초현황조사

본 조사는 서울시의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에 권역 NPO 지원센터의 필요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NPO란 비영리기구의 총칭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NPO 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시 NPO 지원센터,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운영중이고, 자치구별로 운영 및 설립계획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각 NPO의 협업, 공유, 지속가능성, 네트워킹, 사회적 영향력이 발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1. 조사 참가자 이름 *

2. 조사 참가자 전화번호 (설문에 오류발생시에만 연락예정입니다) *

3. 해당 자치구가 어디신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강서구
- 관악구
- 동작구
- 영등포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현황

4. 조직명 *

5. 사무실 주소 or 주로 활동하는 주소 (같은시는 하나만 기입) *

6. 사무실 소유형태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민간 임대 (자부담 월세)
- 민간 임대 (자치구 지원)
- 공공 임대 (자치구 지정 및 지원)
- 무상임대
- 기타: _____

7. 해당 분야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 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 지원도 포함)
- 혁신교육지구
- 협치 (시민협력 플랫폼,민민협력기반조성)
- 기타: _____

8. 조직 대표 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

9. 조직 홈페이지 (온라인 소통채널) *

10. 조직 설립일 *

예: 2012년 12월 15일

11. 지원조직 대표자(센터장) 이름/전화번호 *

12. 상근자수 *

13. 지원조직 1년 예산 *

14. 지원조직 주요 활동 및 연계사업 *

15. 수탁법인 이름 *

16. 수탁법인 법적형태 (범위에 없을시 기타에 추가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고유번호증(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공익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_____

17. 수탁법인 설립목적 *

자치구별 현황조사

18. 권역내 단체들간 비정기적(정책제안,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 아니오

19. 자치구내 단체들간 비정기적(구정 대응,축제,포럼등) 협력 및 연대사업 경험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 아니오

20. 자치구내 NPO가 이용하는 공유공간이 있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없다
- 있다 (민간자율 운영공간)
- 있다 (민간위탁 공공공간)
- 있다 (자치구 직영공간)

21. 자치구내 NPO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알고 계시나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모른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잘 알고 있다

22. 본인 생각에 서남권이라고 하면 어느 자치구를 포함하나요? (중복 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강서구
- 관악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양천구
- 구로구
- 동작구

23.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필요한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네
- 아니오

24.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25.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단체 지원 (예산, 정책, 조직문화)
- 네트워크 지원 (공유공간, 의제별)
- NPO 설립 지원
- 프로그램 지원 (교육, 활동가양성)
- 활동가 지원 (발굴, 역량강화, 복리후생)

26.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중복 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활동가 지원
- 단체 지원
- 네트워크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NPO 설립 지원
- 정책,의제 수립 지원

27. 서남권내 NPO 지원센터는 해당 자치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중복선택 가능)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공동사업 기획
- 인적,물적, 정보 교류
- 프로그램 합동기획 실행
- 공동 아카이빙 관리

자치구별 민관파트너십 현황

최근 3년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포함한 민관협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28. 귀 단체 or 네트워크 or 중간지원조직은 협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예 (바로 밑으로 이동)
- 아니오

29. 있다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고 있나요?

30. 협치사업을 통해 민관파트너십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아주 나빠졌다 아주 좋아졌다

31. 그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32. 참여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9년

서남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SNPO 2019-B-013)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